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현황 · 문제점과 일자리 정상화 방안

2022. 11. 24. (목)

**국내현장
건설공사
입간판**

한국어	미얀마
안전모는 턱끈까지 체결	လုပ်ငန်းစဉ် နှိပ်စက်မှုများကို လိုက်နာရန် အားလုံးက တောင်းဆိုသည်။ ဝန်ထုပ်ဝန်ပိုးများသည် နှိပ်စက်မှုများကို လိုက်နာရန် အားလုံးက တောင်းဆိုသည်။
안전대 반드시 체결	လုပ်ငန်းစဉ် နှိပ်စက်မှုများကို လိုက်နာရန် အားလုံးက တောင်းဆိုသည်။ ဝန်ထုပ်ဝန်ပိုးများသည် နှိပ်စက်မှုများကို လိုက်နာရန် အားလုံးက တောင်းဆိုသည်။
안전난간 설치	လုပ်ငန်းစဉ် နှိပ်စက်မှုများကို လိုက်နာရန် အားလုံးက တောင်းဆိုသည်။ ဝန်ထုပ်ဝန်ပိုးများသည် နှိပ်စက်မှုများကို လိုက်နာရန် အားလုံးက တောင်းဆိုသည်။



주력주의	1. 1911년 ~ 1917년 ~ 1918년 최종목적론적주의
낙하물 주의	1. 1918년 ~ 1919년 ~ 1920년 ~ 1921년 최종목적론적주의

A photograph of a construction site with a large white banner. The banner has text in Korean, Thai, and Vietnamese. The Korean text reads "위험! DANGER!" and "전도(넘어짐) 주의" (Warning of falling). The Thai text reads "ทำงานของเราสะอาดและปลอดภัย" (Our work is clean and safe). The Vietnamese text reads "Cảnh báo: Bị lật" (Warning: Overturning). The banner also features the South Korean flag and the Vietnamese flag. There are redacted areas on the banner.

베트남인 168명 불법 취업 알선하고 7천만원 챙긴 한국노총 간부

입력 2019.07.25. 14:00 수정 2019.07.25. 15:27 댓글 544개

검찰 청구한 영장에 법원 '도주 우려 없다' 기각..결국 불구속기소
취업 알선하고 통장 관리하며 하루치 임금에서 5만원씩 챙긴 혐의



한국노총 [촬영 이상학]

관광통과(B-2) 비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관광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을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취업시키고, 임금 일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7천여만원을 챙긴 한국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출입국 관리법·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증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 지부 부분부장 A(39)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건설사 현장소장 B(53)씨와 A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일용직 노동자 C(53)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 무자격 베트남인 노동자 168명을 불법으로 취업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현장 반장 등을 통해 관광비자로 입국을 했거나 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한 뒤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설현장으로 보낸 외국인 노동자 103명의 임금 통장을 관리하며 7천3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21만원 가량의 임금 중 숙소와 식사비 등을 제외하고도 5만원 가량을 중간에서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A씨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줘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설현장 소장인 B씨는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인 C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A씨의 알선으로 불법 취업을 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국내 근로자 임금 최대 20% 하락[노경목의 미래노트]

한국경제, 2021. 10. 17.

노경목 기자

입력 2021.10.17 00:10 | 수정 2021.10.17 16:04

저숙련·저학력 근로자 타격 커
관련 연구 많지만 이슈화 안돼
"중산층 중심의 의제 설정 때문"

많은 이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 조사결과는 11년 전인 2010년 국내 학술이제 실렸던 논문의 연구 결과다. 최근 관련 연구에서도 **저숙련 직무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지 3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의 실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일이 대졸 근로자를 비롯한 중산층 이상이 주로 일자리를 얻는 취업시장에서 벌어졌다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호흡이 긴 학술연구를 통해 이같은 사안이 밝혀지기까지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없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도 이슈화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의제설정 구조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다.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숙련·저학력 계층과 관련된 문제 자체가 진지하게 고민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기도 하다.

**중산층에 편향된 의제설정과
하위 계층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물리적
공격 등 극단적인 부작용으로
한국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비숙련 근로자 내팽개치고 정규직만 신경 쓰는 나라"

이처럼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들도 외국인 노동 인력 유입으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한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비숙련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점이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숙련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 각자 경쟁력을 갖고 있는만큼 유연한 노동 구조에서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숙련 근로자만큼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임금과 처우가 하락해 선진국일수록 신경 쓴다. 하지만 한국은 일찍부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취약 계층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부유층이나 중산층의 자녀들이 저숙련 근로자로 일하겠나. 결국 **우리 사회의 의제를 중산층 이상이 독점하면서 다른 목소리 자체가 막히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 SK이노베이션 공장 현장 불법취업 시도 한국인 33명 추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 정부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 불법 입국하려던 한국인 33명을 적발해 추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 달 미국에 불법 취업하려 한 한국인들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CBP는 우선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인천에서 온 12명의 입국을 불허했으며, 개월 근무한 후 6천~7천 달러(약 727만원~849만원)를 지급받을 예정인

이들은 자신들이 특정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지녔다는 내용의 고용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증명서는 허위였다고 CBP는 설명했다. **특정활동(E-7) 비자**

SK이노베이션 측은 추방된 한국인들이 자회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 했으며, 미국 협력업체가 불법적으로 고용했다고 22

이어 "해당 근로자들은 현지 회사인 2차~3차 협력업체가 하청 고용해 근로자들로 확인됐다"며 "SKBA에서 해당 협력업체들에 강하게 유감을 표출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2020. 6. 22.

녹색경제신문, 2020. 8. 21.

‘불법’ vs ‘필요 공정’ SK이노 美 공장 건설 현장에 한국인 취업 논란

더글라스 콜린스 미 하원의원 "SK이노 공사 현장에 불법 입국·취업 있었다"
SK이노 "생산 설비 건설 과정에 한국인 노동자 필요... 불법 없도록 협력업체 관리·감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하원의원과 조지아주 건설 노동자들이 미 이민세관국(ICE)에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한국인 불법 입국·취업 정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인 채용을 거부하고 한국인을 고용시켰다는 게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공정이 있으며, 이들의 취업 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관리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현지 언론인 폭스5 애틀랜타는 20일 더글라스 콜린스 미 하원의원이 ICE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콜린스 의원은 서한에서 "조지아주 건설 노동자들의 모임인 유니온72가 SK이노베이션 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로 공사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 공사와 관련된 한국인들의 불법 입국과 취업을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니온72는 "5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우리 대신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공장 건설 현장에 유니온72 조합원 500명이 지원했으나 한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해법없는 건설현장 노노갈등...성남 재개발 현장 열흘 넘게 충돌

대한경제, 2020. 2. 10.

상생 협약까지 맺었지만 눈 앞 일자리 두고 다툼 격화
현장 가동 올스톱...건설사 속앓이

지난달 29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의 한 재개발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산업노조)이 채용 문제로 대립하면서 현장 문이 열흘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건설현장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조합원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장 가동이 올스톱된 것이다. 지난해 6월 건설노사정이 건설현장의 노노갈등을 줄여보자며 상생 협약서까지 체결했지만 노조의 알력으로 일자리가 결정되는 채용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건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노 갈등이 표출되면 외부에서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조합원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보니 양보가 어렵고, 갈등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건설현장 노노 갈등을 풀 뚜렷한 해법이 당장 없다는 점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 일자리가 줄고 있어 건설현장의 노노 갈등은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현장에 불법 외국인 채용이 많은 것도 노노 갈등이 심해지는 요인으로 꼽힌다. 불법 외국인력이 늘어날 수록 내국인 일자리는 줄게 되고 그만큼 노조들 사이에 일자리 확보 싸움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Q> 인력부족? vs. 일자리부족?

[스페셜리포트] 건설노조 불법 악화... 노노 갈등·채용 강요 심각

전자신문, 2022. 4. 12.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2차 실태조사 중간 집계를 한 결과, '1개 현장 3개 이상 동시다발 부당행위 발생' 유형이 79.6%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진행된 1차 실태조사(66.7%)보다 12.9%p가 급증했다.

주요 부당행위 유형으로 '채용강요'가 26.1%를 기록, 1차 실태조사(20.9%)보다 5.2%p 증가했다. 업계는 현 정부 들어 지역 건설업계 노조의 채용강요 행위가 특정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여 타 지역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차 례

I 건설산업 일반

II 건설업 일자리 실태

III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문제점

IV 비정상 건설일자리 원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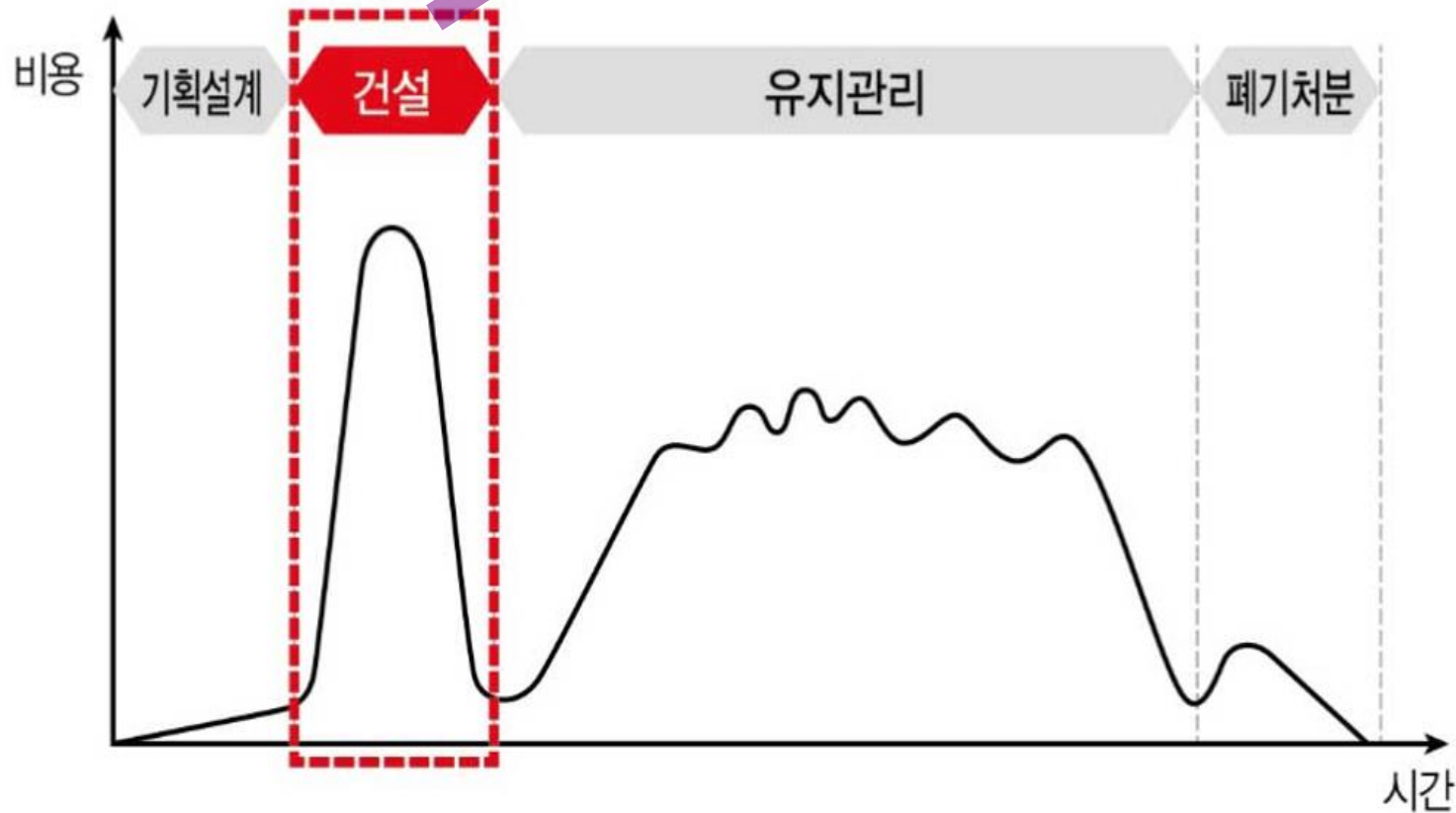
V 건설업 일자리 정상화 방안

I. 건설업 일반

시설물 생애주기비용

* LCC(Life Cycle Cost)

LCC 中 건설(시공)단계는 단위시간당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시기로서, 건설기능인력의 고용단계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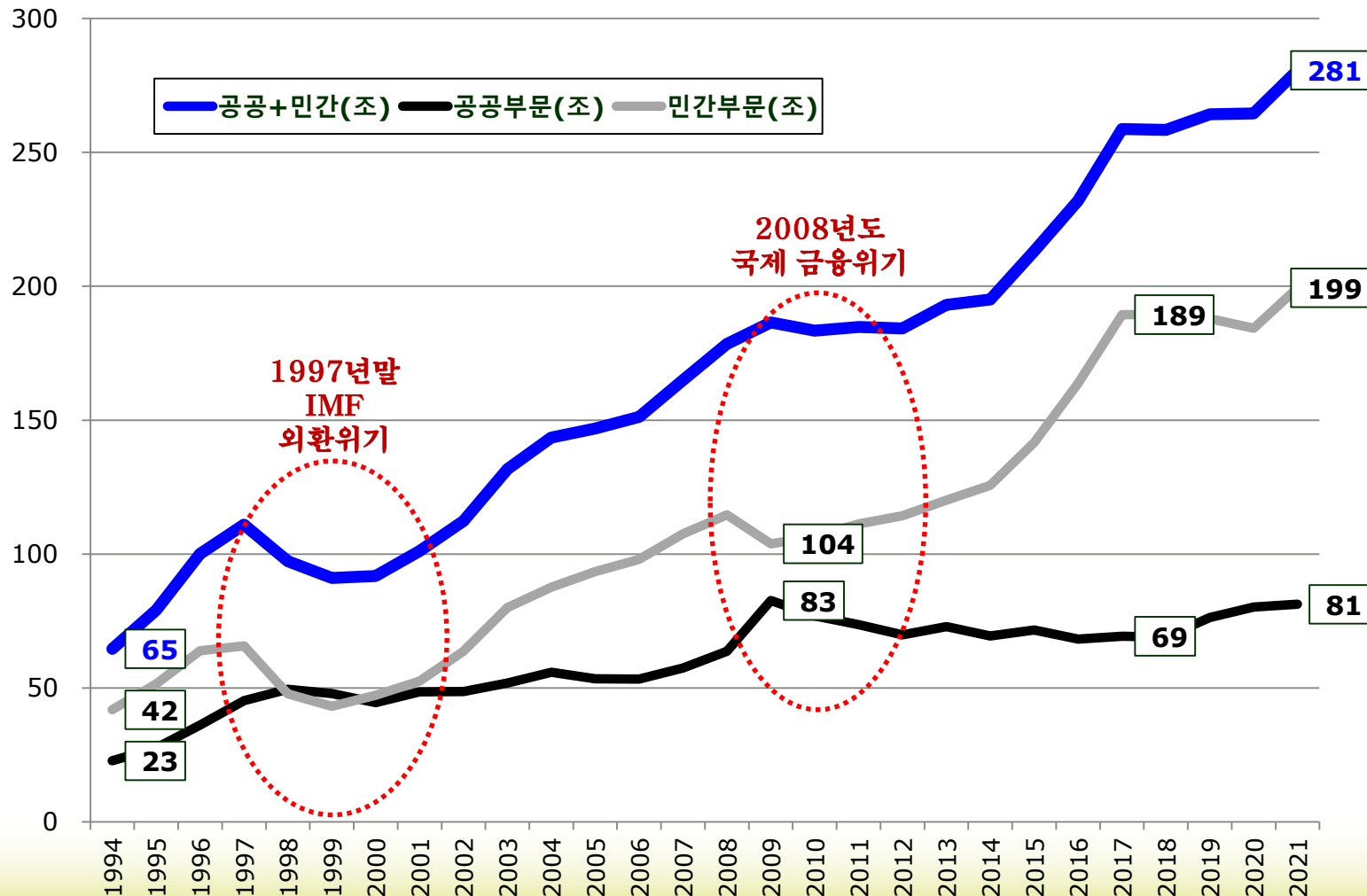
※ 추진순서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 발주 → **시공**
→ 유지관리 및 사후평가 → 폐기

* (기)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 (폐)기처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단위: 조원)



2021년
등록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총 등록) :

종합건설업체 14,264개사

전문건설업체 50,255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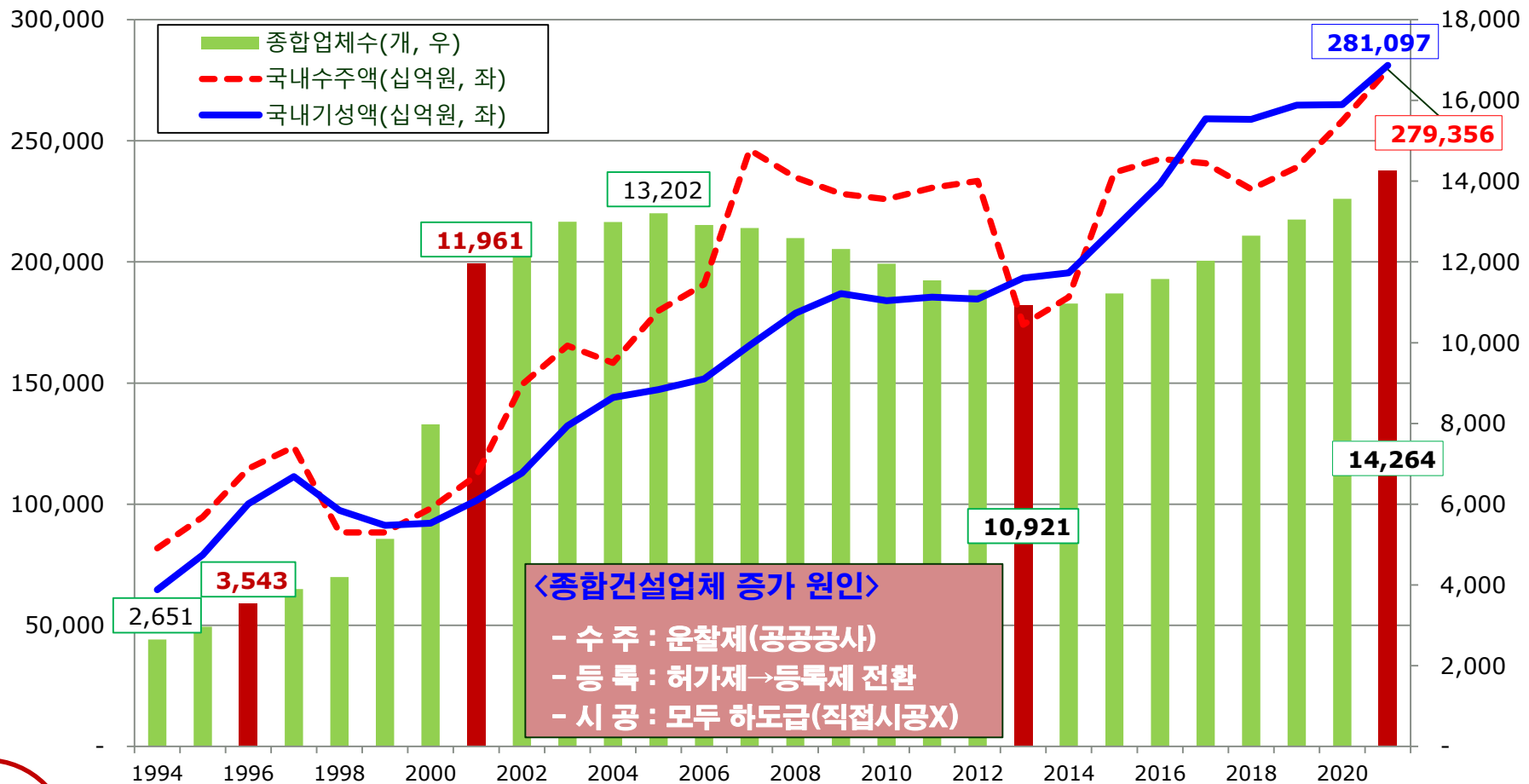
✓ 그외 및 타법 공사업체 :

전기공사업 등 약 4.5만개

➔ 11만개 이상

연도별 기성액 및 종합업체수

* 자료: 통계청 및 민간건설백서 정리 편집



실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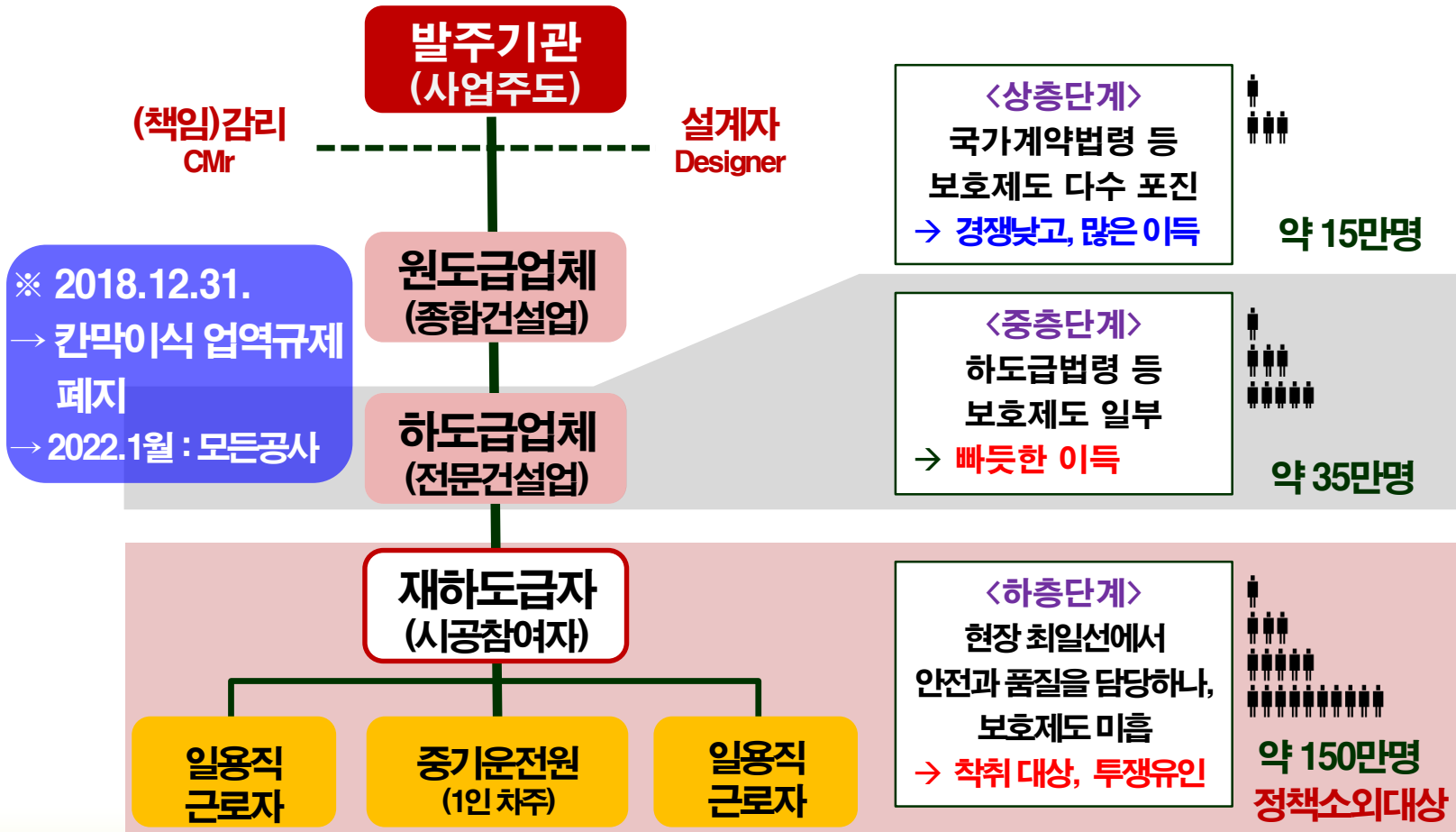
- 고위험
- 고령화
- 외노자
- 불법고용
- 체불
- 서민경쟁
- 해외적자

:

의문점

1. 1997년말경 국제외환위기(IMF)로 기성액 급감했는데, 왜 건설업체수는 급증하였나?
2.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감소/폐업을 주장함에도, 왜 업체수는 증가하나?

건설산업 생산구조



발주 방식	상층부 (원도급)	중층부 (하도급)	하층부 (일용직)
적격심사	전혀 없음	치열한 가격경쟁	치열한 노임경쟁 + 저가 외국인근로자와 일자리 경쟁
터키	없음 (가격 담합)		
기술제안	없음 (가격 담합)		
중심제 중평제	거의없음		

전체 약 200만명

II. 건설업 일자리 실태

취업자 수: 전산업 vs. 건설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산업 (천명)	22,682	22,831	23,188	23,561	23,775	23,688	24,033	24,527	24,955	25,299	25,897	26,178	26,409	26,725	26,822	27,123	26,904	27,273
건설업 (천명)	1,830	1,814	1,838	1,864	1,828	1,735	1,768	1,772	1,797	1,780	1,829	1,854	1,869	1,988	2,034	2,020	2,016	2,090
비중 (%)	8.1%	7.9%	7.9%	7.9%	7.7%	7.3%	7.4%	7.2%	7.2%	7.0%	7.1%	7.1%	7.1%	7.4%	7.6%	7.4%	7.5%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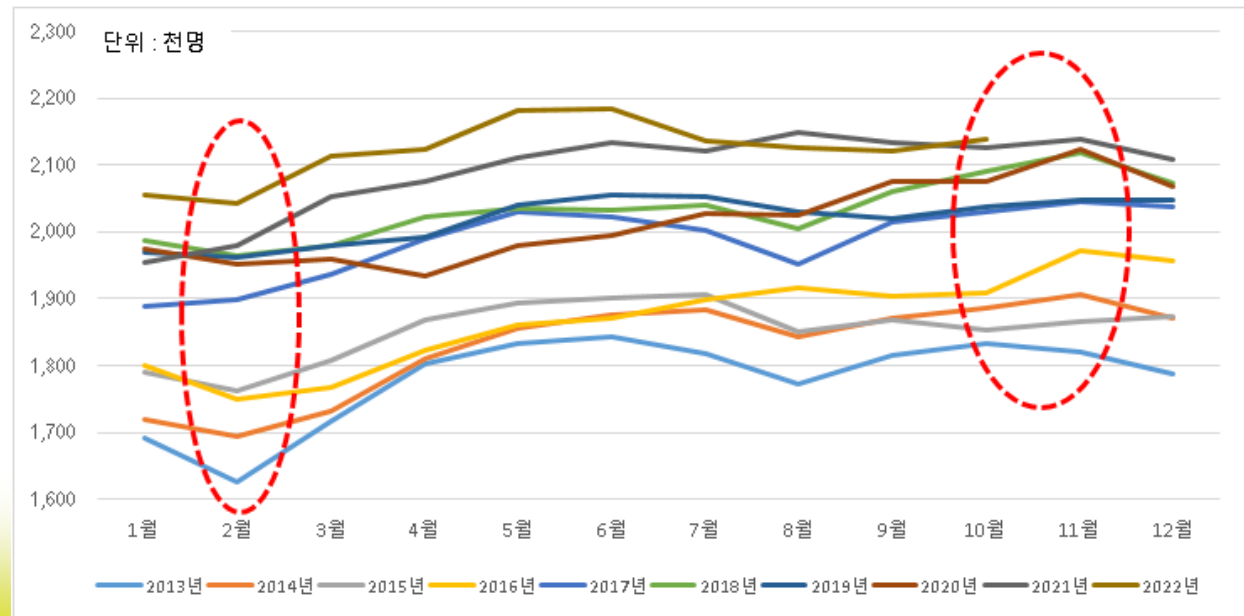
➡ 건설기성액은
GDP 대비 : 13.6%

✓ 건설업 취업자수는
2007년 이후 감소, 2018년 200만 돌파
최근 건설업 비중은 7.1~7.7%

계절별 일자리 편차가 심하다!

➡ 취업자 편차
: 약 8~10%

✓ 월별 취업자는
2월(동절기)이 최소, 11월이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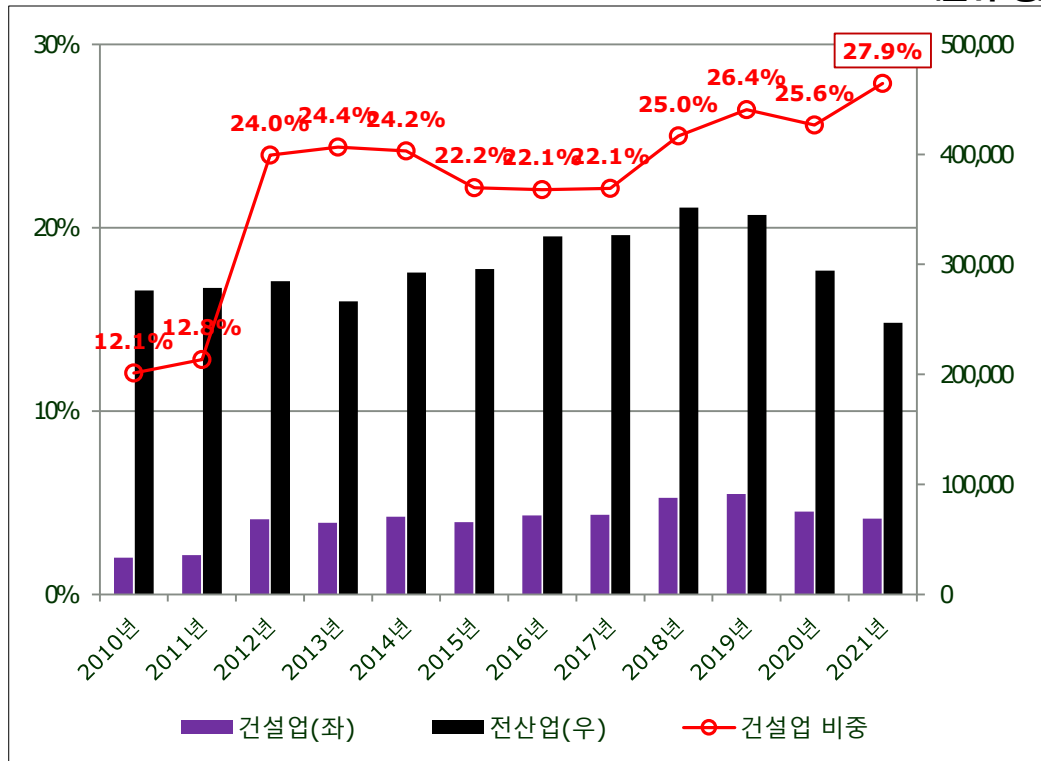
임금 체불

체불방지 vs. 적정임금 보장

체불의 대부분은
하도급단계에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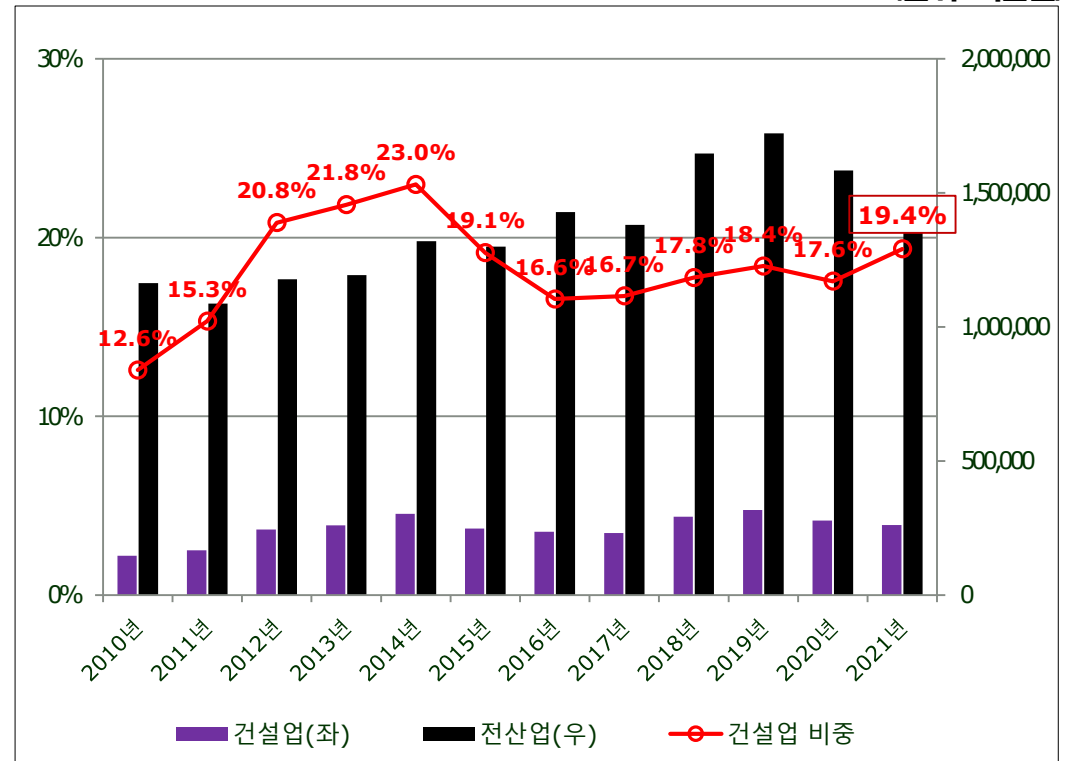
체불근로자수(명) (2010년~2021년)

(단위: 명)



체불금액(백만원) (2010년~2021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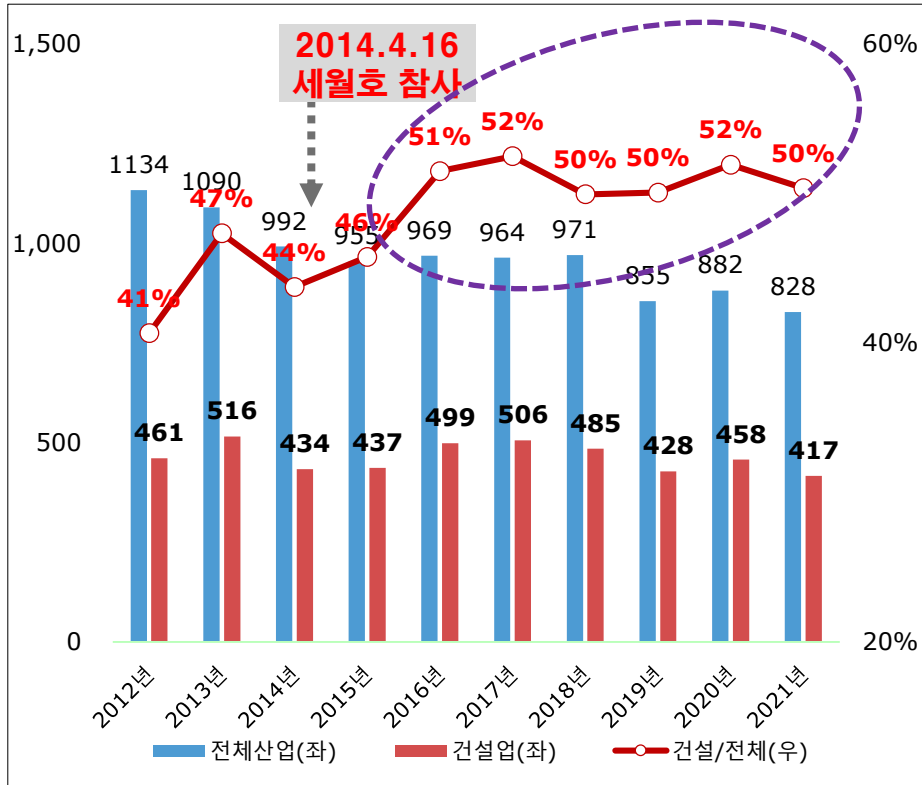


건설업
체불방지
대책

- ✓ 최초의 임금체불 방지대책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2012년)** - MB정부
- ✓ 지자체 최초의 임금직불제 :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2012년 10월)**
- ✓ 중앙정부 임금직불제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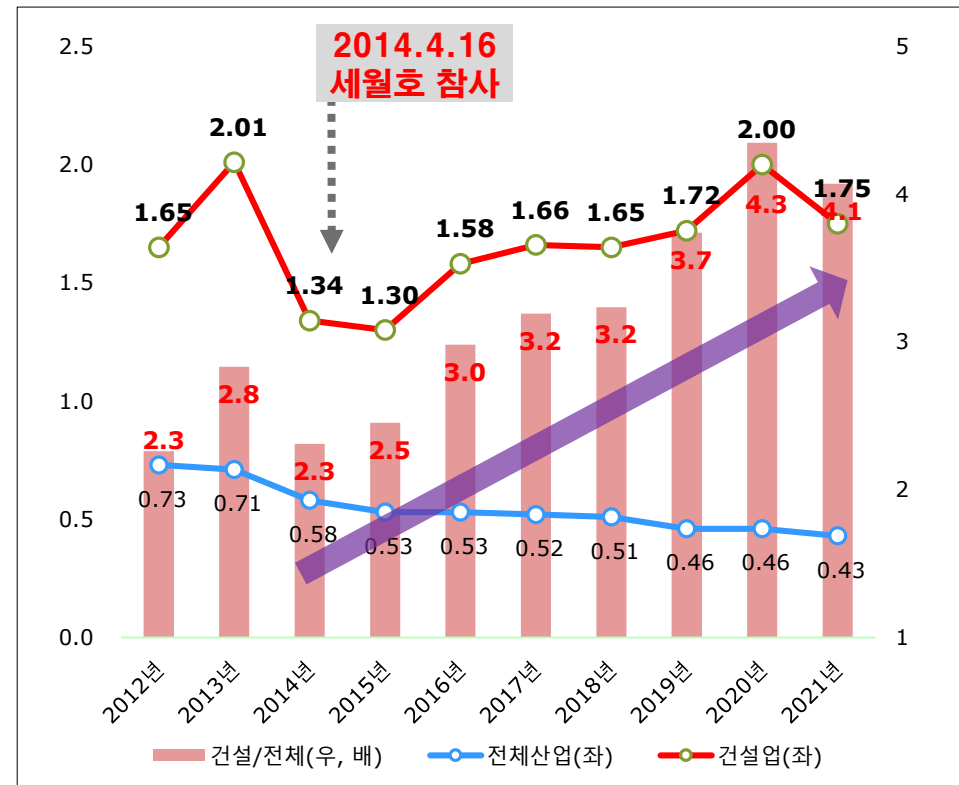
건설안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12~'21)



가장 위험한 산업군,
청년들이 일하러 올까?

건설업 사고사망 만인율('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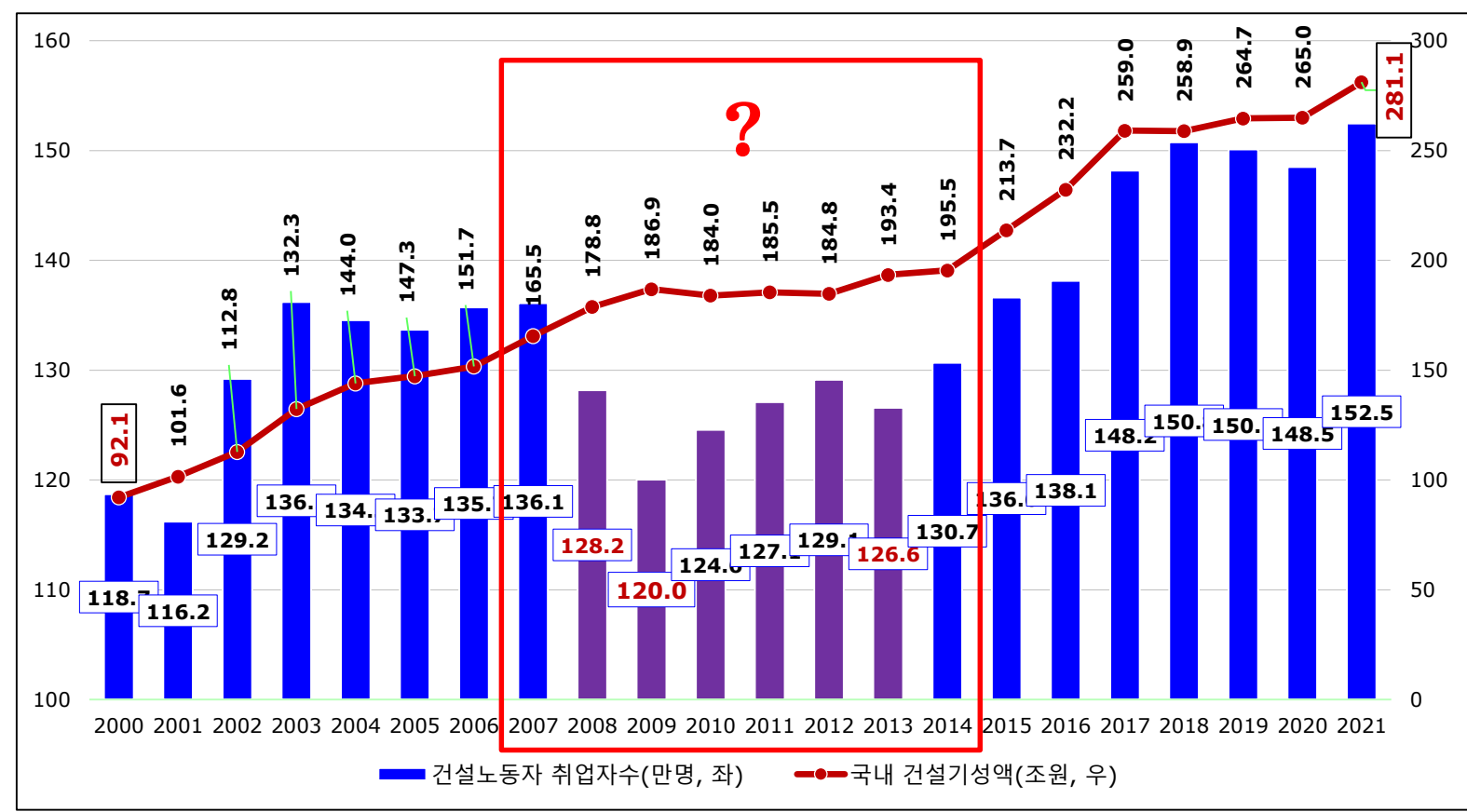


건설업
사고
사망자

- ✓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매년 450~500명 → 전(全)산업 사고사망자의 **절반(약 50%)** 차지
- ✓ 건설업 **사고사망 만인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일시적 하락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
→ 2021년도는 전년대비 소폭 양호, 그럼에도 **전(全)산업 대비 4.1배나 높음**

※ 2003.11.29. 노무현대통령은 한국국적 부여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조선족(중국동포)에게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격려문을 남김

기성액 및 건설기능인력 취업자 수



중국동포 여러분. 힘내세요.
국정난 범 제타가 우리들 자유를 지 못하게
하긴 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여러분
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2003. 11. 29
대통령 노무현

✓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수는 2007년 이후 갑자기 감소 *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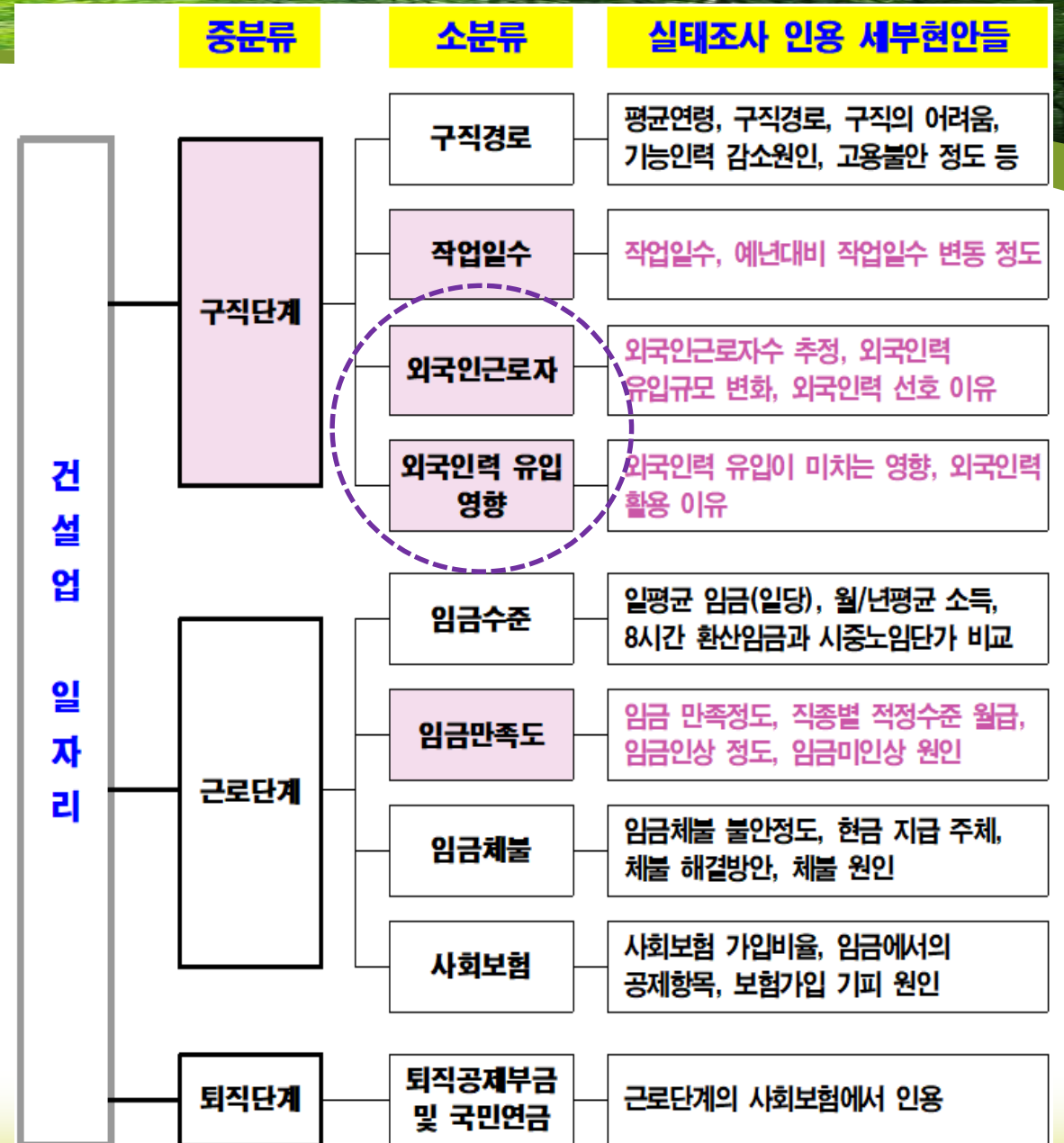
✓ 2007. 1.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2003.8.16.제정)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를
전부개정하여,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였음. → 불법고용 급증의 원인(?)

건설업 일자리 현안 조사

- ✓ 노동강도에 비하여 낮은 임금, 체불 등의 문제해결이 중요함
- ✓ 하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적정 임금제가 도입되어도 그림의 떡
- ✓ **현재 있는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 → 불법고용 방조는 행정부의 직무유기, 배임
- ✓ 불법고용자에 따른 일자리감소만 해결되어도, 건설투자를 늘리지 않고서도 상당수 일자리문제 해결할 수 있음

- ✓ 정부는 불법고용 단속에 소극적이고, 건설업계는 외국인 수입을 대폭 늘려 달라는 정책로비
- ✓ **오히려 양대노총은 불법고용단속 비판**
- ✓ 자국민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넘겨주거나, 침탈당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직무유기

**일자리
구직단계가
가장 중요**



III.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문제점

1. 고용허가제 & 취업등록제

특례고용제 비교

구 분	고용허가제(E-9)	건설업 취업등록제(H-2)
대상 인력	양해각서 체결한 송출국가의 국민 (베트남, 태국 등 16개 국가)	외국국적 동포 (중국 등 11개 국가)
체류 및 취업기간	취업기간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 → 최대 4년 10개월)	3년+1년 10개월(취업) *4년 10개월 경과시, 출국후 재입국
도입 제한 규모	2023년도 쿼터를 3,000명으로 확대 (누적 가능) 최대 1만 2,000명	최대 5만 5,000명 (누적 불가)

- 이론상 건설업의 최대 합법고용인원은 약 6만 7,000명
- 2022년도 쿼터 늘림 : 2,400명 → 3,000명

고용허가제 및 취업등록제 등

■ 고용허가제(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시행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건설업체가 국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국내에서 14일 이상 구인노력을 하고서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대상

■ 건설업 취업등록제(H-2)

- 2007년 3월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 외국 국적 동포의 급증으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제기되자, 200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설업체가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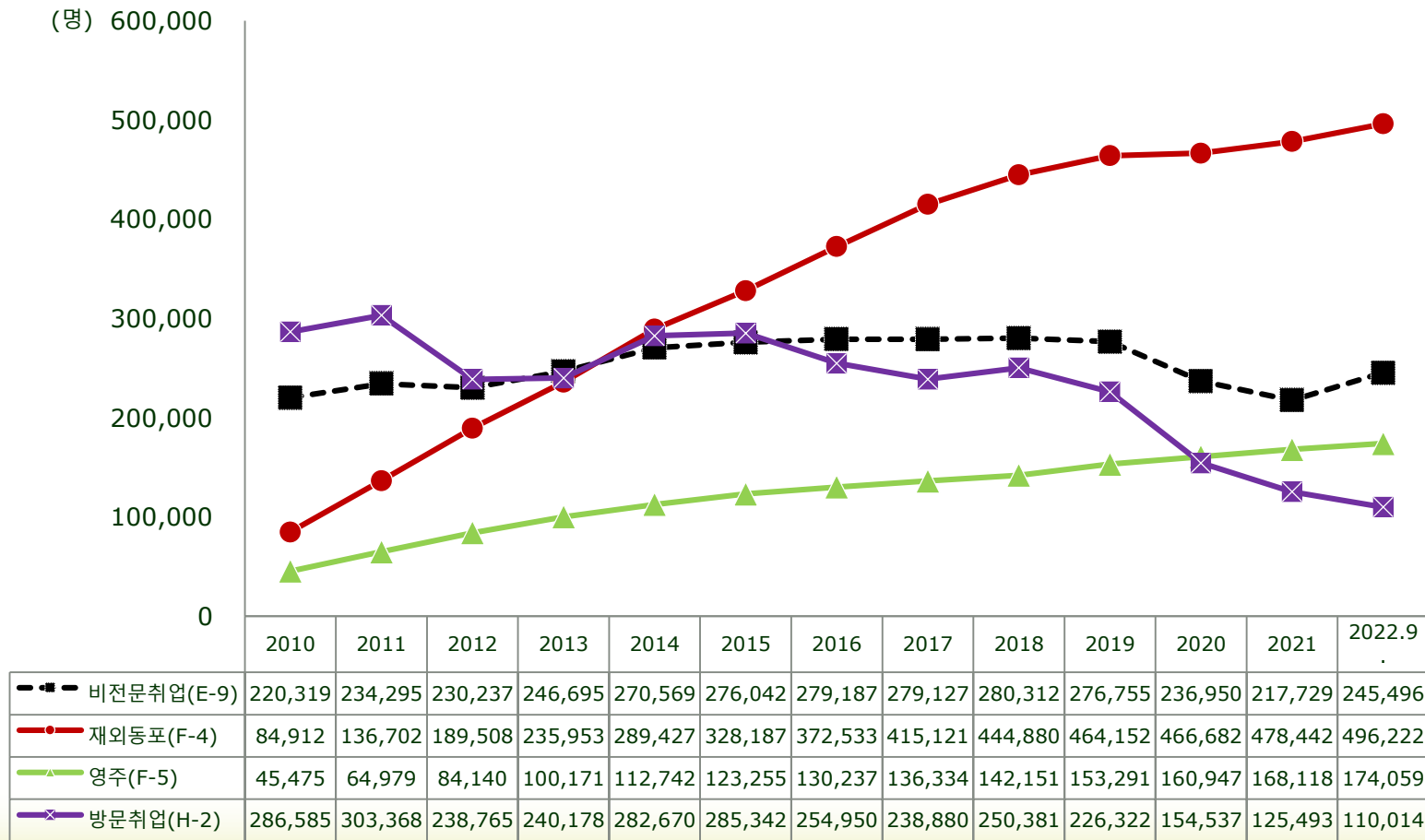
■ 재외동포(F-4)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자에게 부여되는 국내 체류자격
-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없음

- 고용허가제와 취업등록제는 비숙련공만 고용 가능
- 외국인 숙련공 고용은 특정활동(E-7) 비자. 현실은 숙련공 부족

자격별 체류외국인수 추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등록제(H-2), 재외동포(F-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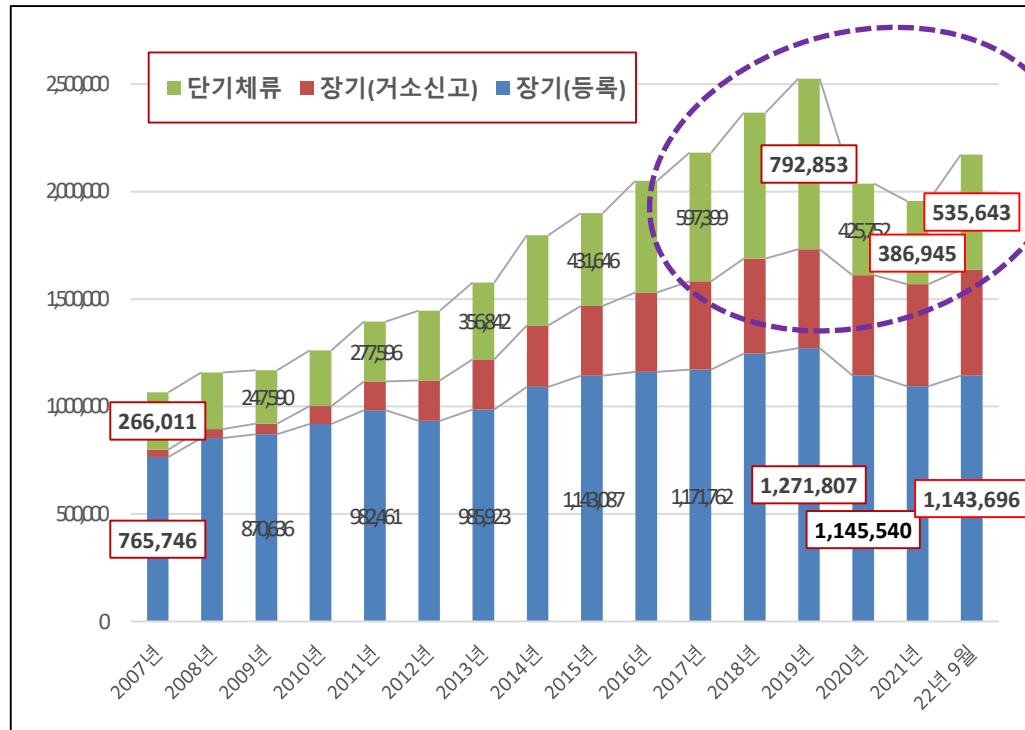
외국인원수 추이

- 재외동포(F-4)의 증가세 뚜렷
: 8.5만명(2010년)→ **49.6만명**(2022.9.)
→ **총 체류인원 관리 않음**
- 방문취업(H-2)는 2015년
기점으로 하락반전후, 하락세 지속
→ **총 체류인원 규모 관리**
→ 2022년 9월 기준 체류인원수는
2010년 인원수의 1/2 이하로 감소
- 비전문취업(E-9)의 증가세는 매우
완만 → **총 체류인원 규모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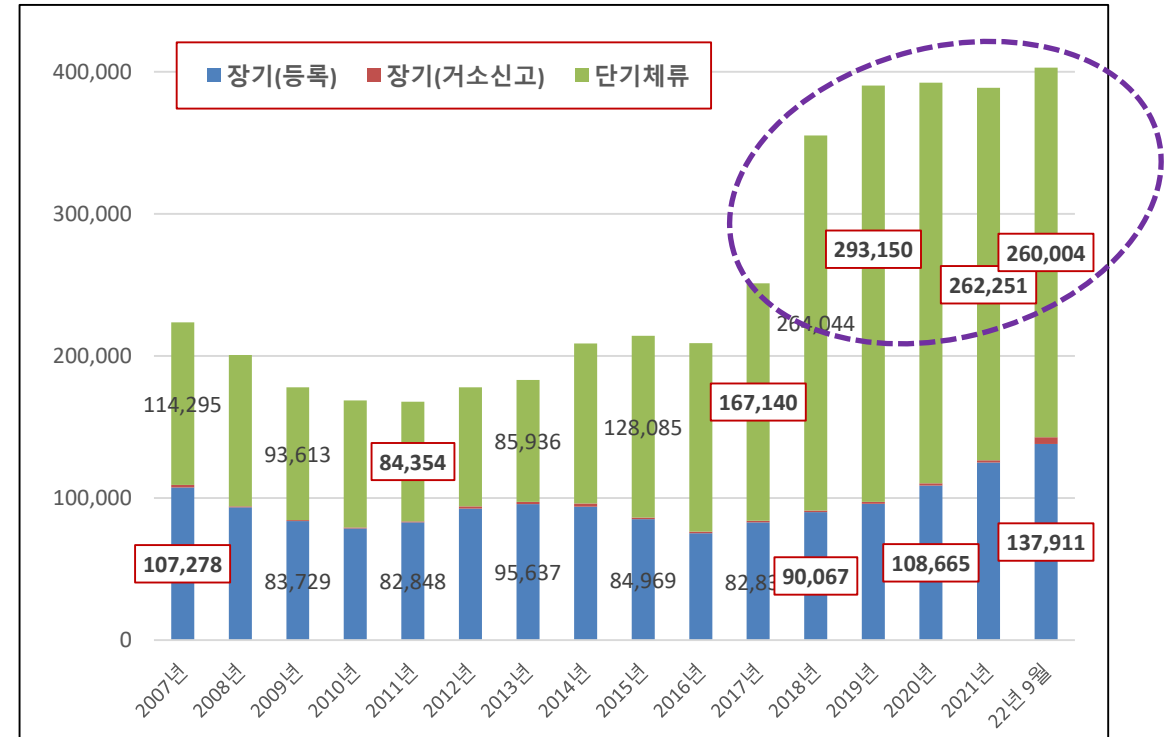
외국인 체류(불체자) 현황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및 월보

체류외국인 현황(2007년~2022년 9월)



불법체류자 현황(2007년~ 2022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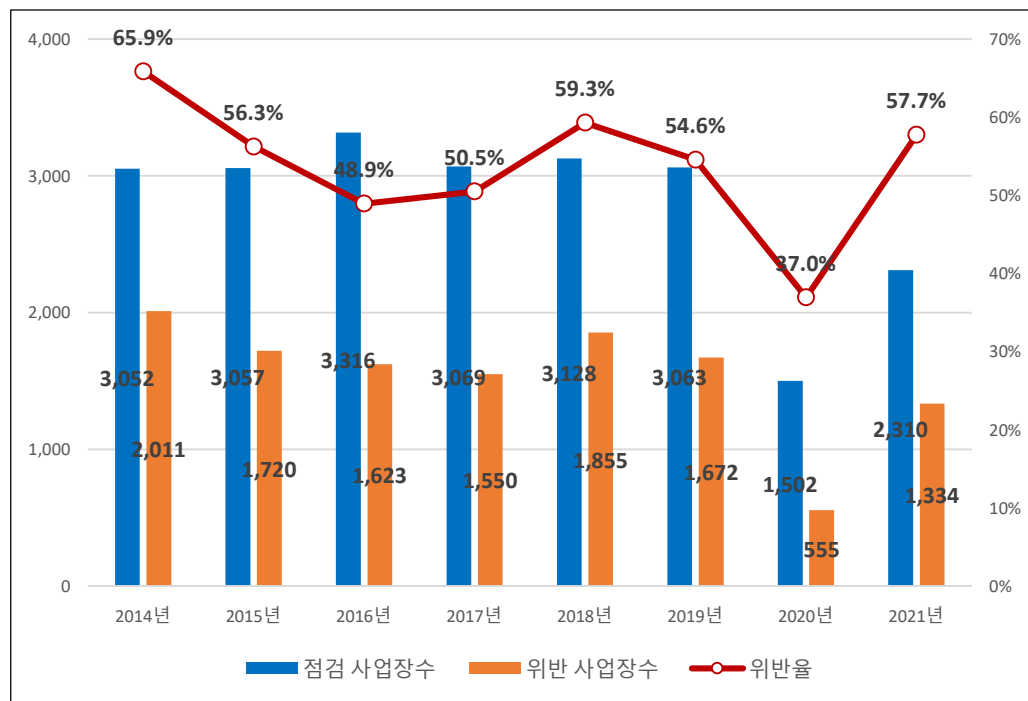


- ✓ 지난 13년간 체류외국인 2배 가량 증가 : **106.6만명(2007년)** → **252.2만명(2019년)** → **217.2만명(2022년 9월)**
- ✓ 불법체류자는 2011년까지 감소후, 급격히 증가 : **22.3만명(2007년)** → **16.8만명(2011년)** → **40.2만명(2022년 9월)**
- ✓ **2018년부터 불법체류자 급격히 증가**, 그중 단기체류자 증가정도가 가장 큼 ※ 최저임금증가와 비례(?)
- ✓ **합법체류자도 불법고용되기**에, 불법고용자수는 불법체류자보다 많음 → ※ 불법취업(X), 불법고용(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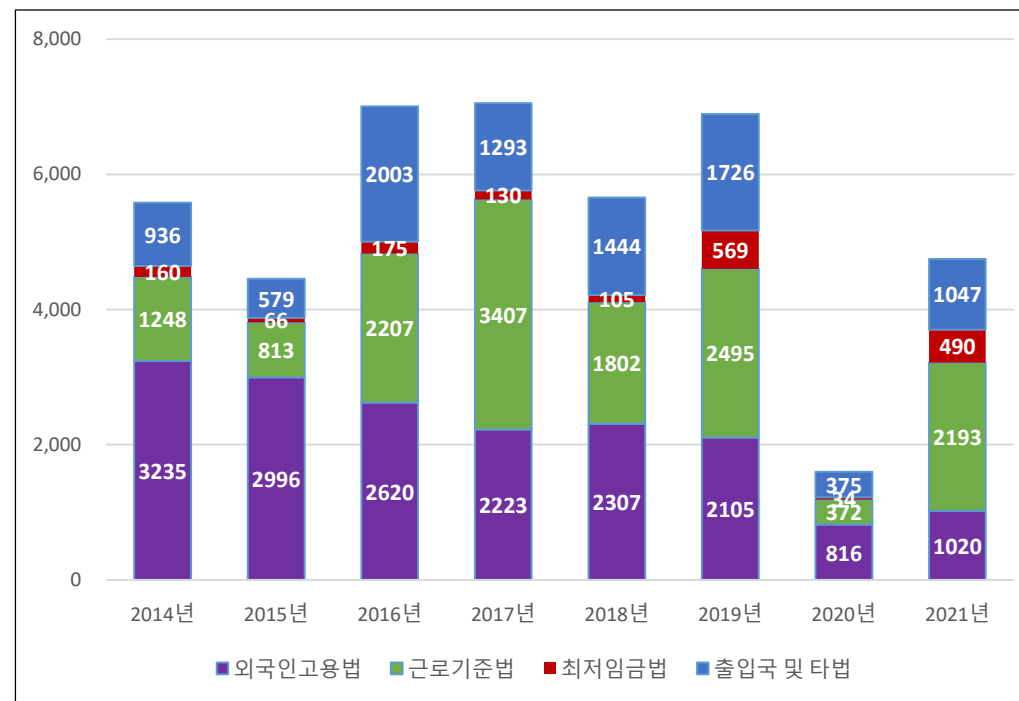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전(全)산업

자료 : 고용노동부

점검사업장 및 위반사업장 (단위: 개)



위반내용별 위반건수 (단위: 건)



- ✓ **년도별 점검사업장 1,500~3,000개소 → 위반사업장 1,500~2,000개소 : 위반율 평균 53.8% ※ 2020년은 예외적 상황(코로나)**
- ✓ **위반사업장의 평균 위반 건수 : 2.8건(2014년) → 4.6건(2017년) → 3.6건(2021년)**
- ✓ **위반내용 순 : 외국인고용법 및 근로기준법이 가장 많음. 최저임금법 위반 적음(2019, 2021년: 건수 많음)**

2. 건설업 외국인력 현황

건설투자 증가시,
일자리창출 효과 있나?

불법고용에 의한 일자리 잠식 → 외노자 약35만명은 전체150만 일자리의 약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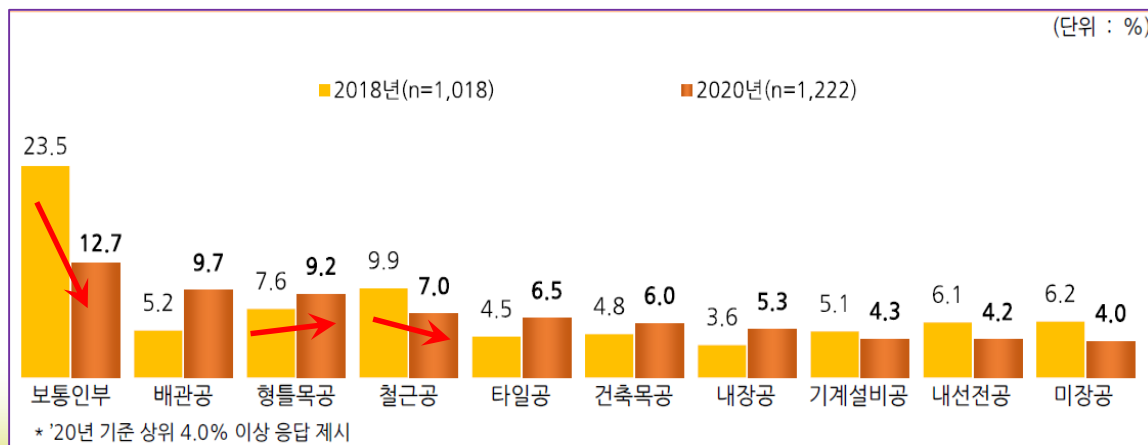
- 2010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 → **내국인 일자리 잠식 & 내국인 노임하락 원인**
- 합법적 고용가능 최대 외국인 일자리 : 취업등록제(H-2) **5만 5,000명**
고용허가제(E-9) **1만 2,000명**
※ **합법 외국인 근로자 : 최대 6.7만 + F4(재외동포)**

〈2021년도 외국인 건설근로자 규모 보정(추정)〉

설문조사에 의한 외국인력 수	귀화자 (내국인 신분)	영주(F-5) 조선족 (내국인 신분)	실제 외국인력 수		
(A)	(B)	(C)	(D=A-B-C)	합법근로	불법근로
354,157	5,491	32,286	316,380 (100%)	37,358 (11.8%)	279,022 (88.2%)

출처 :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2021. 12.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주된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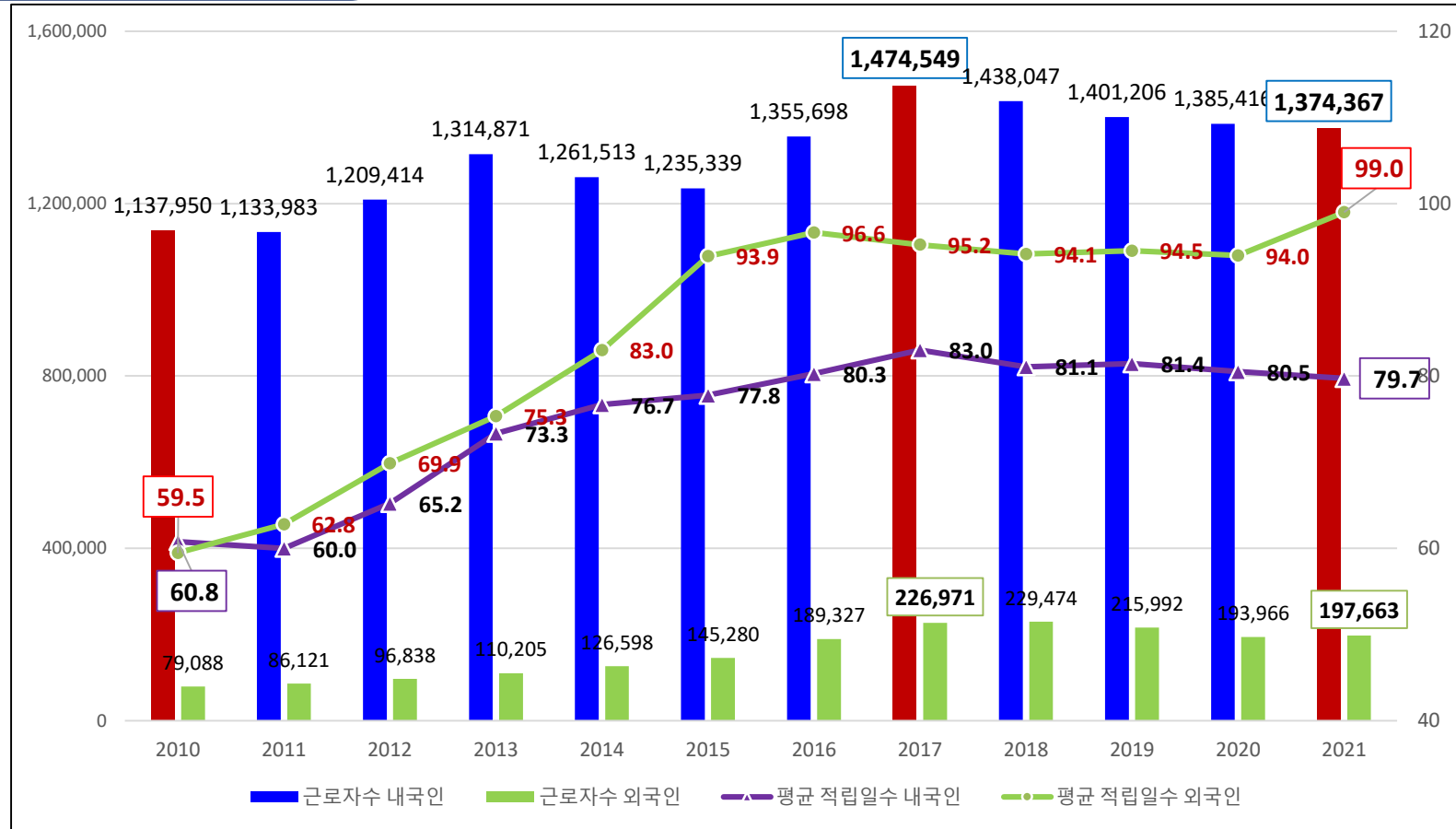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종합생활실태조사, 2020년 11월

※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방향

- **보통인부(비숙련공)의 증가, 감소 반복**
→ 국내 타산업에서의 신규 유입 감소
→ **but, 비숙련공을 외국인으로 대체 정책로비**
(건설업 일자리 부족현상으로 볼 수 있음)
- **형틀목공 및 철근공 감소추세**
→ **숙련인력 부족**
→ **숙련인력 양성체계 구축 시급**

내외국인 퇴직공제부금 비교

자료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 적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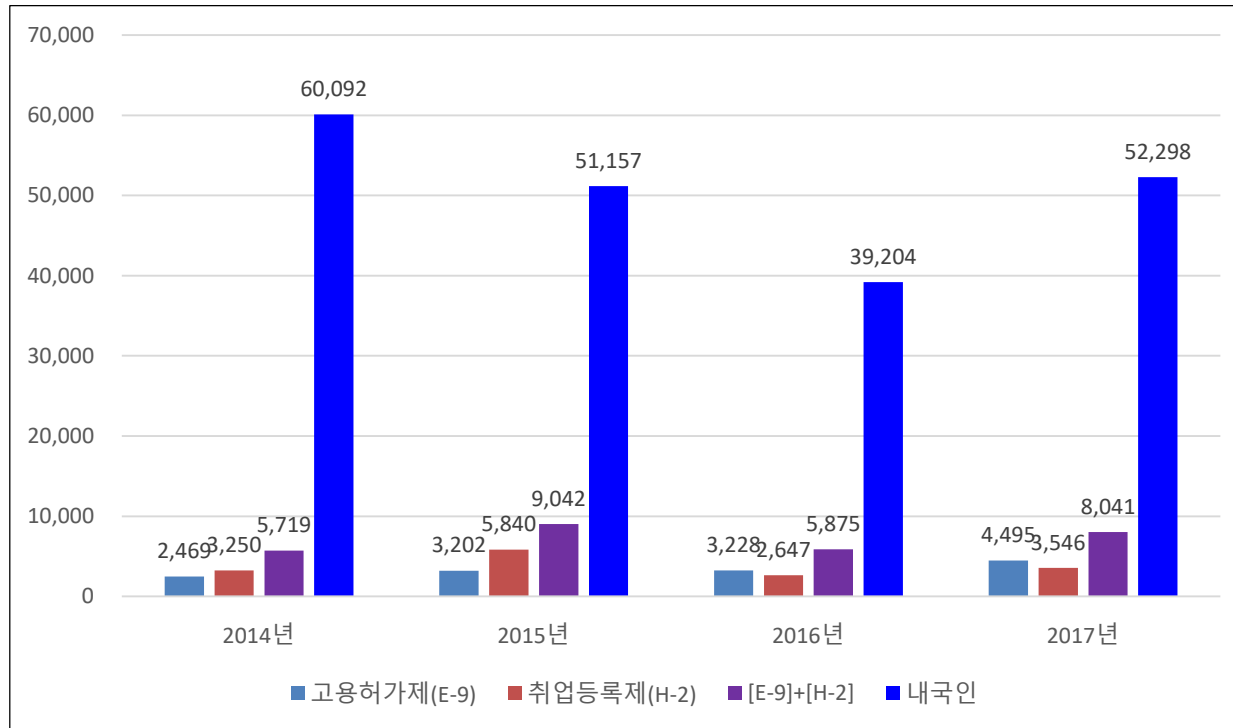
- 총 적립 건설근로자수
: 122만(‘10년)→157만(‘21년)
- 내국인근로자수
: 114만(‘10년) → 147만(‘17년)
→ 137만(‘21년) *10만명 감소
- 외국인근로자 비율
: 6.5%(‘10년)→12.6%(‘21년)
- 전체 평균 적립일수
: 60.7일(‘10년)→82.1일(‘21년)

퇴직공제
부금
적립현황

- ✓ 지난 12년간 **적립인원수** : 내국인은 **1.2배** 증가, 외국인은 **2.5배** 증가
- ✓ 지난 12년간 **평균적립일수** : 내국인 60.8일→**79.7일(↑ 18.9일)**, 외국인 59.5일→**99.0일(↑ 39.5일)**

건설현장 외국인력 실태

주요 발주기관의 인력실태조사 점검 결과(2014년~2017년)



조사기관 현황

- NH공사
- 국토관리청
서울, 부산,
대전, 원주
- 국가철도공단
의 현장근로자
- 2014년은
국가철도공단
제외
- 2018년부터는
인력실태조사
대부분 미시행

- ✓ 외국인 인력은 전체의 약 13%. E-9은 증가세 → 외국인력 중 다수를 점유(토목현장 중심)
- ✓ 외국인 인력을 전체 건설사업장(150만명 규모)으로 환산하면, 약 20만명 내외
- ✓ 불법고용 사업장은 NH공사(건축공사)에서만 소수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①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5. 고용허가받지 않은 자 고용
6. 취업비자 없는자 고용

건설현장 외국인 규모 추정

건설투자 감소에 대비하여
출구전략 수립 필요

출처 :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2021. 12. - 건설근로자공제회

2016년도

행정 통계상의 외국인력 규모	체류자격별 외국인력 전체	귀화 동포 (내국인 신분)	영주(F-5) 동포 (내국인 신분)	실제 외국인력 수 (설문조사에 의한 외국인력 규모)		
(A=B-C-D)	(B)	(C)	(D)	계	합법취업	불법취업
270,961	338,264	51,237	16,066	275,644	51,190	224,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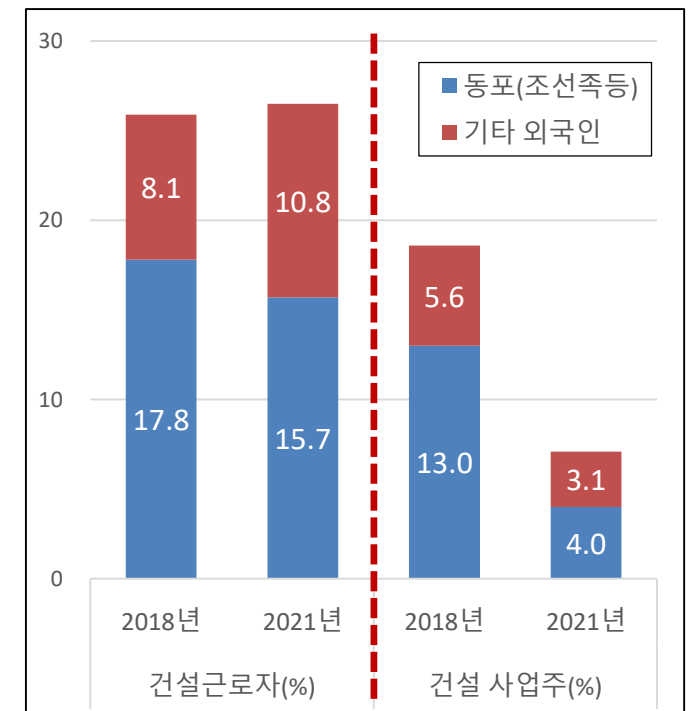
2018년도

설문조사에 의한 외국인력 수	귀화자 (내국인 신분)	영주(F-5) 조선족 (내국인 신분)	실제 외국인력 수		
(A)	(B)	(C)	(D=A-B-C)	합법근로	불법근로
350,342	4,364	23,638	322,340 (100%)	63,270 (19.6%)	259,070 (80.4%)

2021년도

설문조사에 의한 외국인력 수	귀화자 (내국인 신분)	영주(F-5) 조선족 (내국인 신분)	실제 외국인력 수		
(A)	(B)	(C)	(D=A-B-C)	합법근로	불법근로
354,157	5,491	32,286	316,380 (100%)	37,358 (11.8%)	279,022 (88.2%)

건설근로자 중 외국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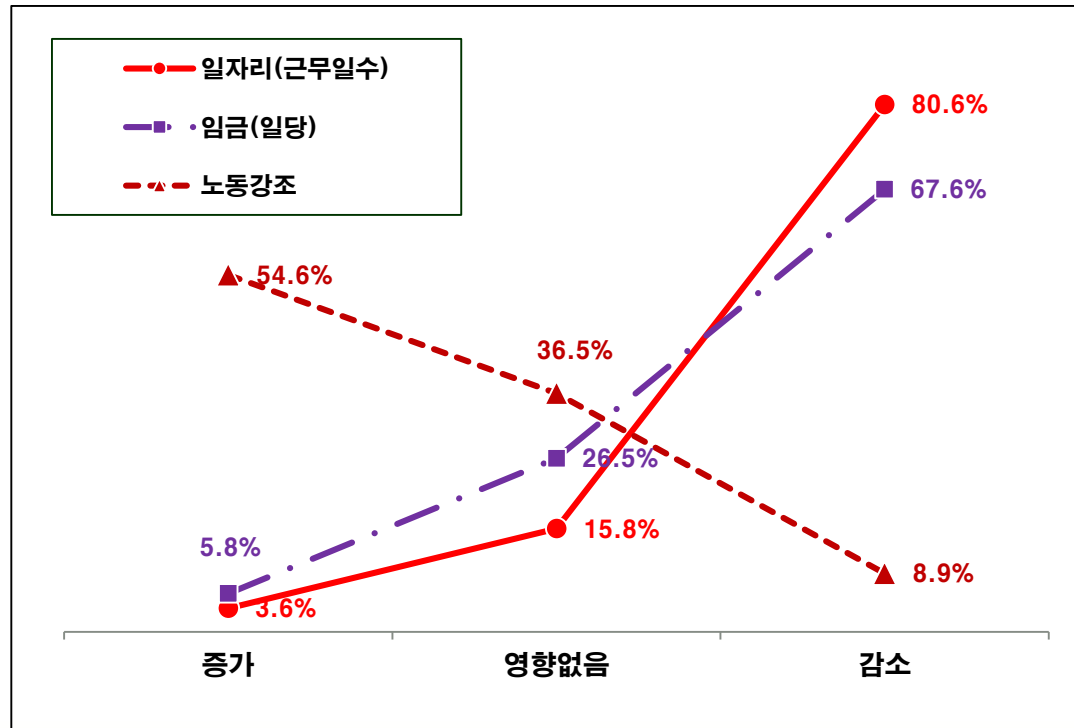
- ✓ 건설사업주는 외국인비율 매우 낮게 인식
- ✓ 특히 건설사업주는 2021년도가 더 낮음(추정: 코로나영향)
- ✓ 재외동포 비중이 줄고, 외국인 증가세

3. 외국인력 유입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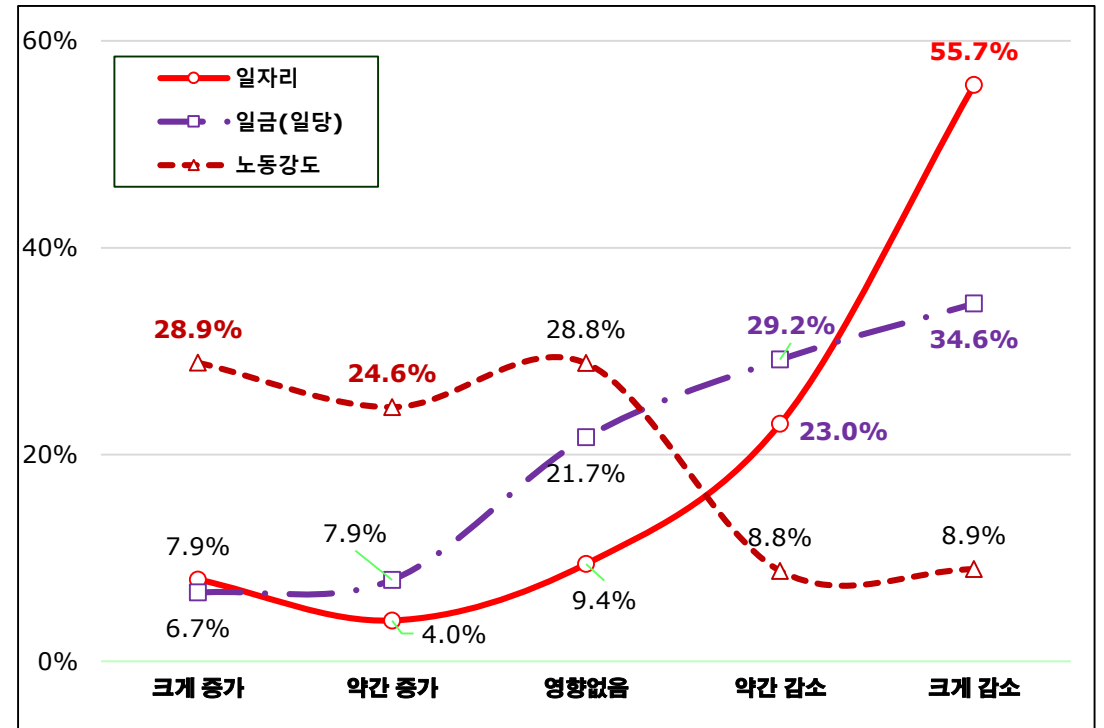
만약,
정규직 일자리가 이렇게 되었다면?

- 일자리 감소 : 78.7~80.6%
- 임금(일당) 하락 : 63.8~67.6%
- 노동강도 증가 : 54.6~53.5%

건설노동자 임금 등 실태조사(건설노조, 201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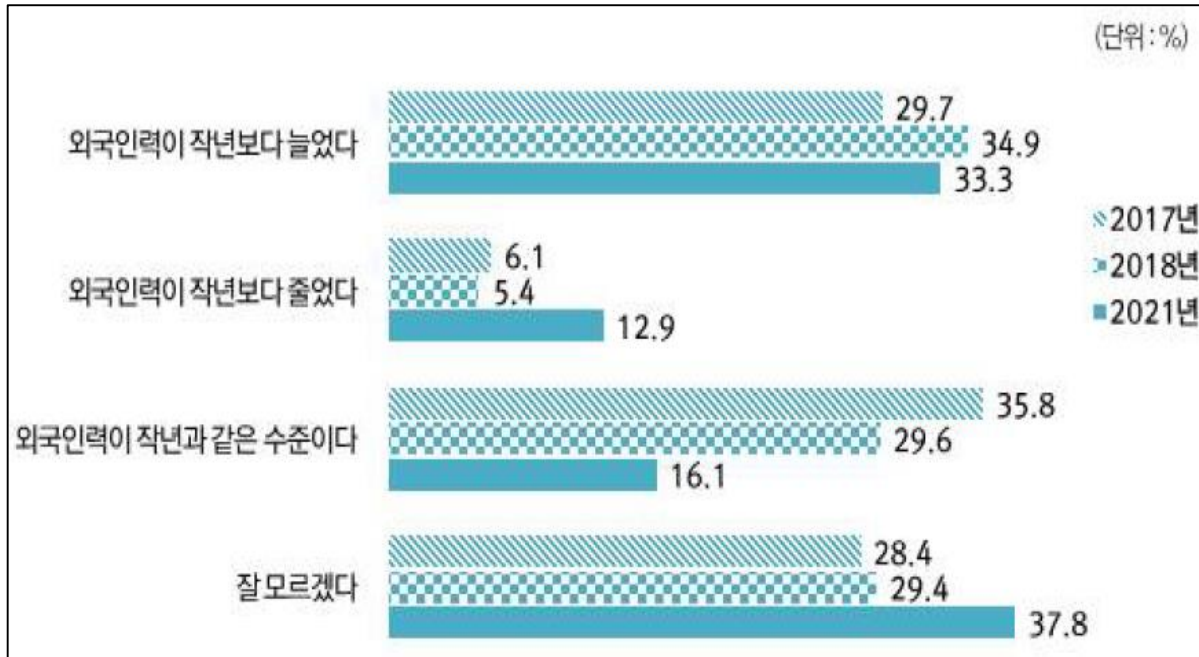


건설노동자 임금 등 실태조사(건설노조, 201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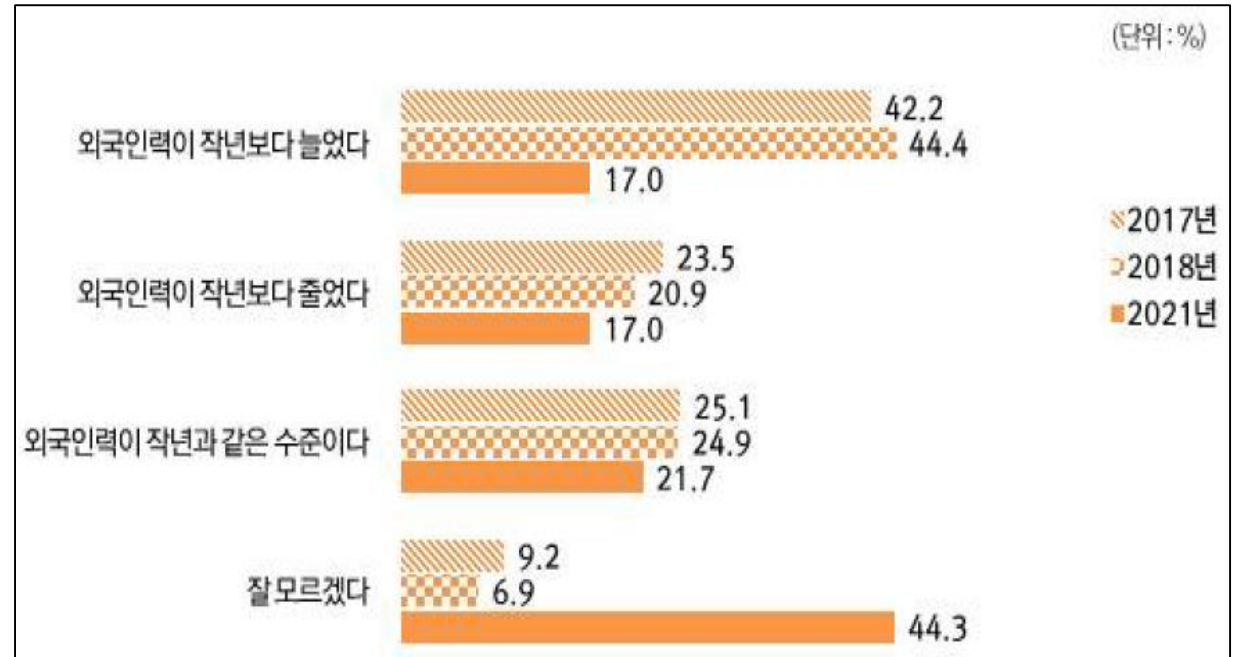
2020년 대비 외국인근로자 규모 변화

건설근로자 응답



- ◆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설문조사, 2017.
- ◆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설문조사, 2018.
-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2021.

건설사업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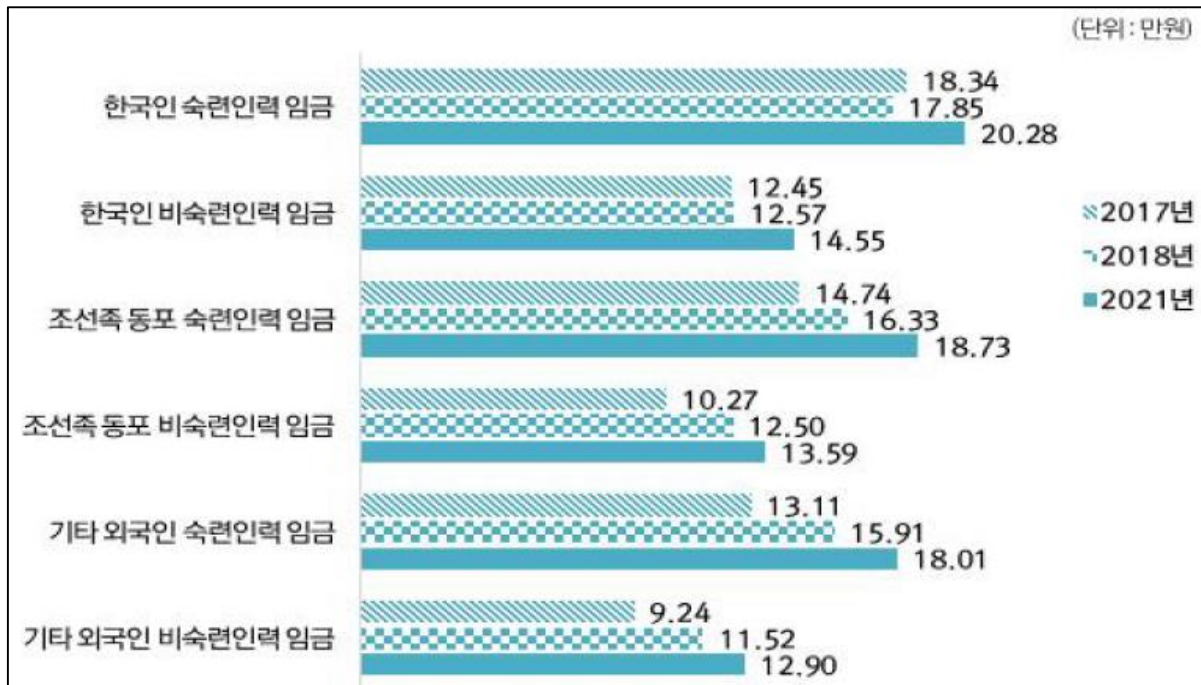
외국인
규모

- ✓ 건설근로자: 외국인력 증가가 많다고 인식 vs. 건설사업주 : 외국인력 많지 않은 것으로 인식
- ✓ 작년보다 늘었다 : 33.3% vs. 17.0%
- ✓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 16.1% vs.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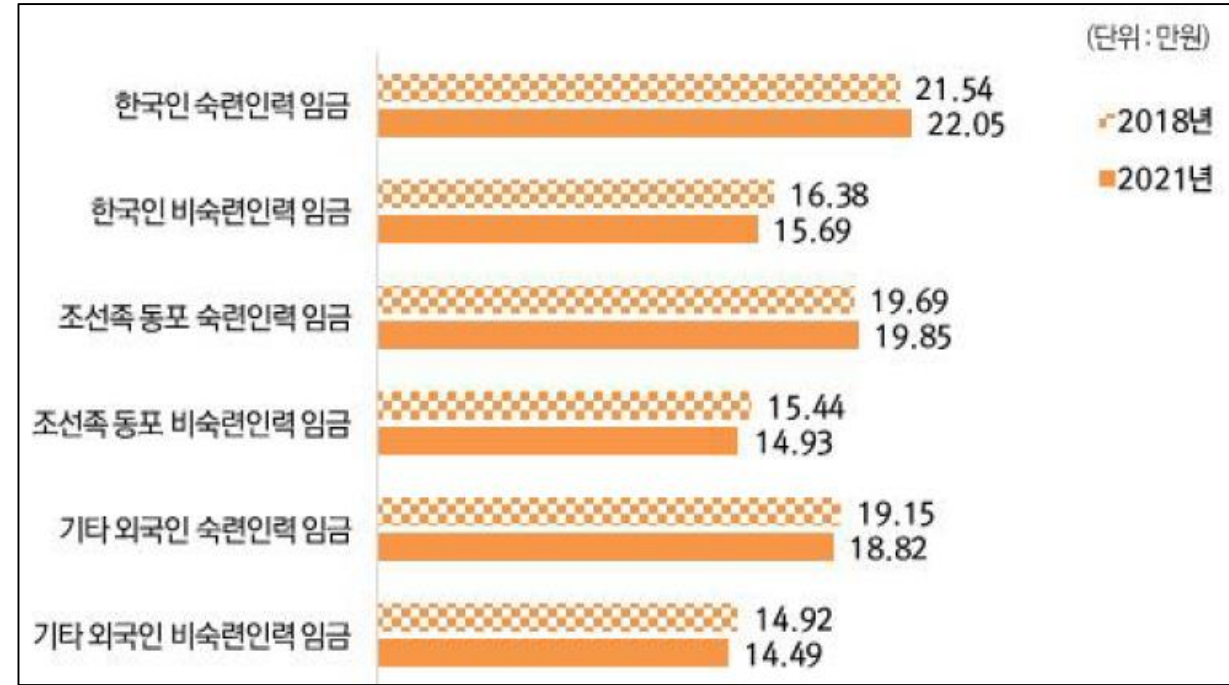
👉 건설근로자와 사업주와의
인식차이 큼

내외국인 평균 임금 비교

건설근로자 응답



건설사업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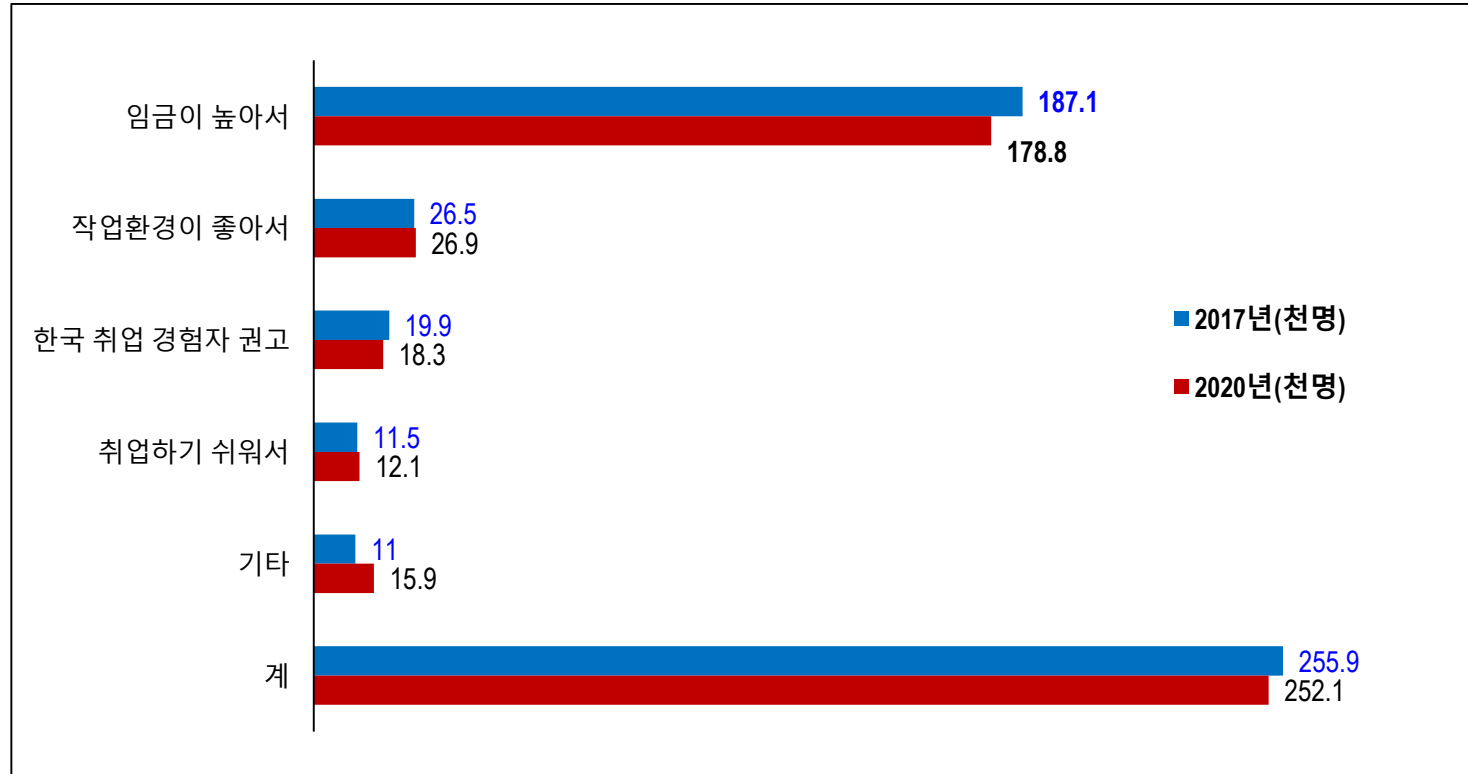


평균
임금

- ✓ 숙련공 임금차 : **1.55만**(한국인vs.동포)
2.27만 (한국인vs.외국인)
- ✓ 비숙련공 임금차 : **0.96만**(한국인vs.동포)
1.65만 (한국인vs.외국인)

- ✓ 숙련공 임금차 : **2.20만**(한국인vs.동포)
3.23만 (한국인vs.외국인)
- ✓ 비숙련공 임금차 : **0.76만**(한국인vs.동포)
1.20만 (한국인vs.외국인)

외국인력이 한국을 선택 이유



자료 : 통계청, 이민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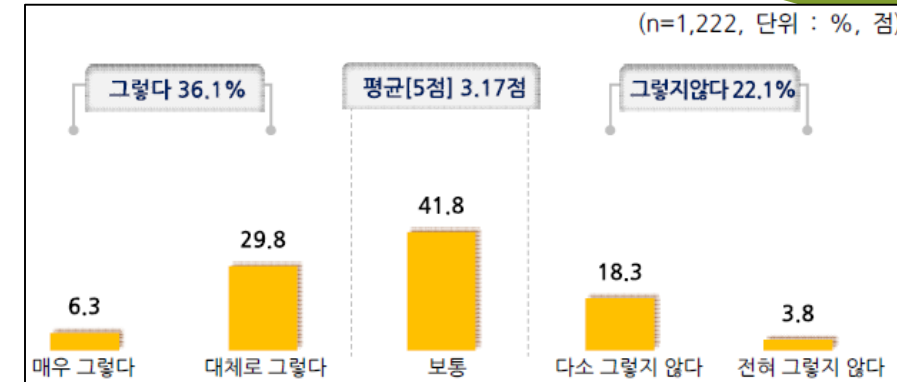
비율	임금이 높아서	작업환경이 좋아서	한국 취업 경 험자 권고	취업하기 쉬워서	기타
2017년	73.10%	10.40%	7.80%	4.50%	4.30%
2020년	70.90%	10.70%	7.30%	4.80%	6.30%

-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의 임금이 높음을 압도적으로 선택(73.1%~70.9%).
그런데, 내국인에게 낮은 임금(수입) 직종에 해당함.
➔ 외국인 유입은 내국인 근로조건 악화(임금하락 등)로 작동함

불법고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장 목소리

- “아파트와 같은 민간건축 공사장은 외국인이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제2롯데월드 건설공사는 외국인이 얼마인지는 점심시간 때 알 수 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는 외국인만 바글바글하다. 내국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제2롯데월드 1년 이상 근무 근로자)
- “언젠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의 SH공사현장[구로항동지구] 방문이 예정된 적이 있었는데, 방문 당일 점심식당 인원이 예전의 약 300명에서 1/3 수준인 100명만 식사를 하였다” (김○○ 건설노조 ○○지부장) →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불법고용 극성

건설근로자 연간소득(수입) 만족도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실태조사(2020)

- [시사점]
내국인 건설근로자 연간소득은 3D직업에도 35백만원에 불과 → 임금만족응답 : 36.1%

※ 의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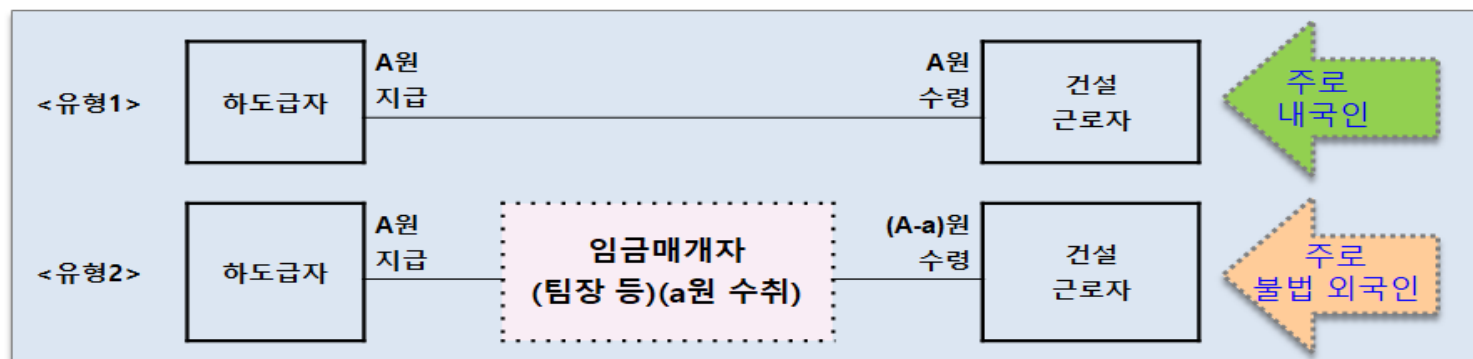
1. 임금이 높은 유럽, 미국, 일본보다 왜 한국을 더 선호하나?
2. 불법 고용 단속은 인권침해인가? 아니면 공공의 직무유기인가?
3. 불법고용을 묵인 · 방조하면 누가 이득을 얻나? 서민에게 이득인가?

IV. 비정상 건설일자리 원인 구조

생산구조 & 비용구조

➤ 임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임금지급 경로의 유형 및 임금중간착취 발생

[출처 : 심규범, 건설현장의 일자리 위기 진단 및 정책방향 토론회 발제문, 2017.11.27]



<예시>



현장
실태

1단계(발주자 → 원청) : 경쟁없이 공사비보장 → 예산 추가 소요 → 예산낭비
2단계(원청 → 하청) : 치열한 가격경쟁 → 하도급차액으로 원청 이익만 증가
3단계(하청 → 재하청) : 임금매개자(오야지 등) → 공사비누수 → 불법고용 난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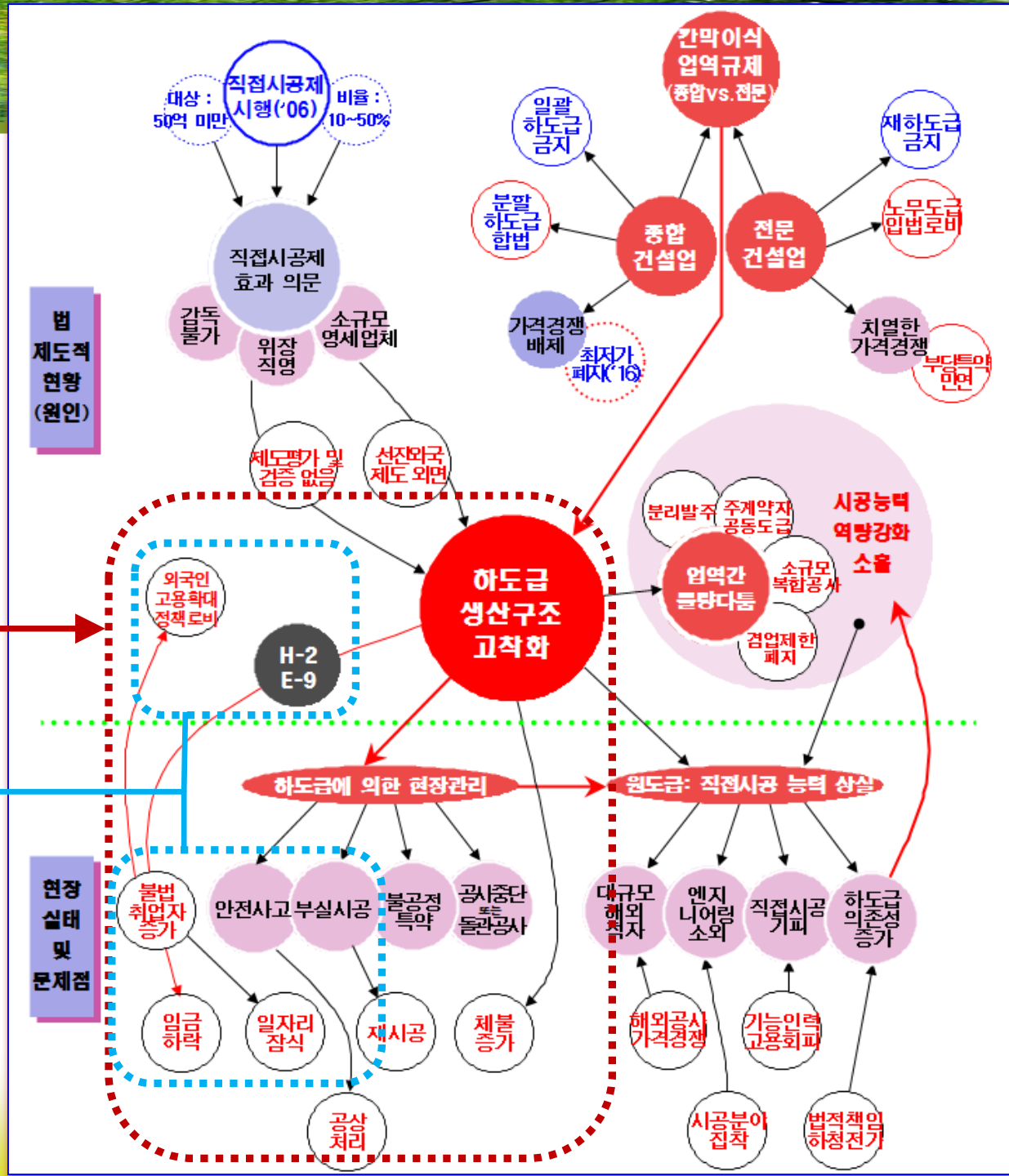
생산구조문제 원인 구조도

➤ 2개 부문으로 구분

위 : 법 · 제도적 현황 → **원인**에 해당

아래: (재)하도급 생산구조 고착화
→ **문제점** 부문

- 하도급구조 고착화 및 불법재하도급 등으로 불체자의 불법고용 양산
- 불법고용으로 서민일자리가 불법적으로 빼앗기고 있음
- 하지만 정부와 상충부 양대노총은 불법고용 묵인 · 방조



하도급 생산구조에 따른 현상 → 원도급업체의 국제경쟁력 약화
→ 최종 피해자는 발주자와 국민!

시공
주체

❖ 도급계약자와 실제 시공업자가 상이

- 원도급이 낙찰받아 계약체결 → 실제 시공은 임의선정된 하청업체가 수행
- 형식상 기준(하도급율 82% 이상)만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하도급 가능
- 결국, 건설사업장의 실질적 점유자는 하도급업체가 됨

부당
거래

❖ 부당 · 불공정 하도급특약 만연(Risk 전가)

- 대기업 현장일지라도 각종 체불 수시로 발생
- 원도급은 시공능력이 아니라 하도급관리에만 치중 → 부당특약 만연
- 하도급업체 공사포기시 공사중단 불가피 → 발주자에게 피해 전가

역량
상실

❖ 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 능력 상실

- 건설근로자 직접고용 안함 → 일자리 질 하락
- 업역간 물량다툼 치열 : 주계약자방식, 분리발주, 소규모복합공사 등
- 적정공사비 로비에 치중 →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분야는 계속 소외

임금하락 원인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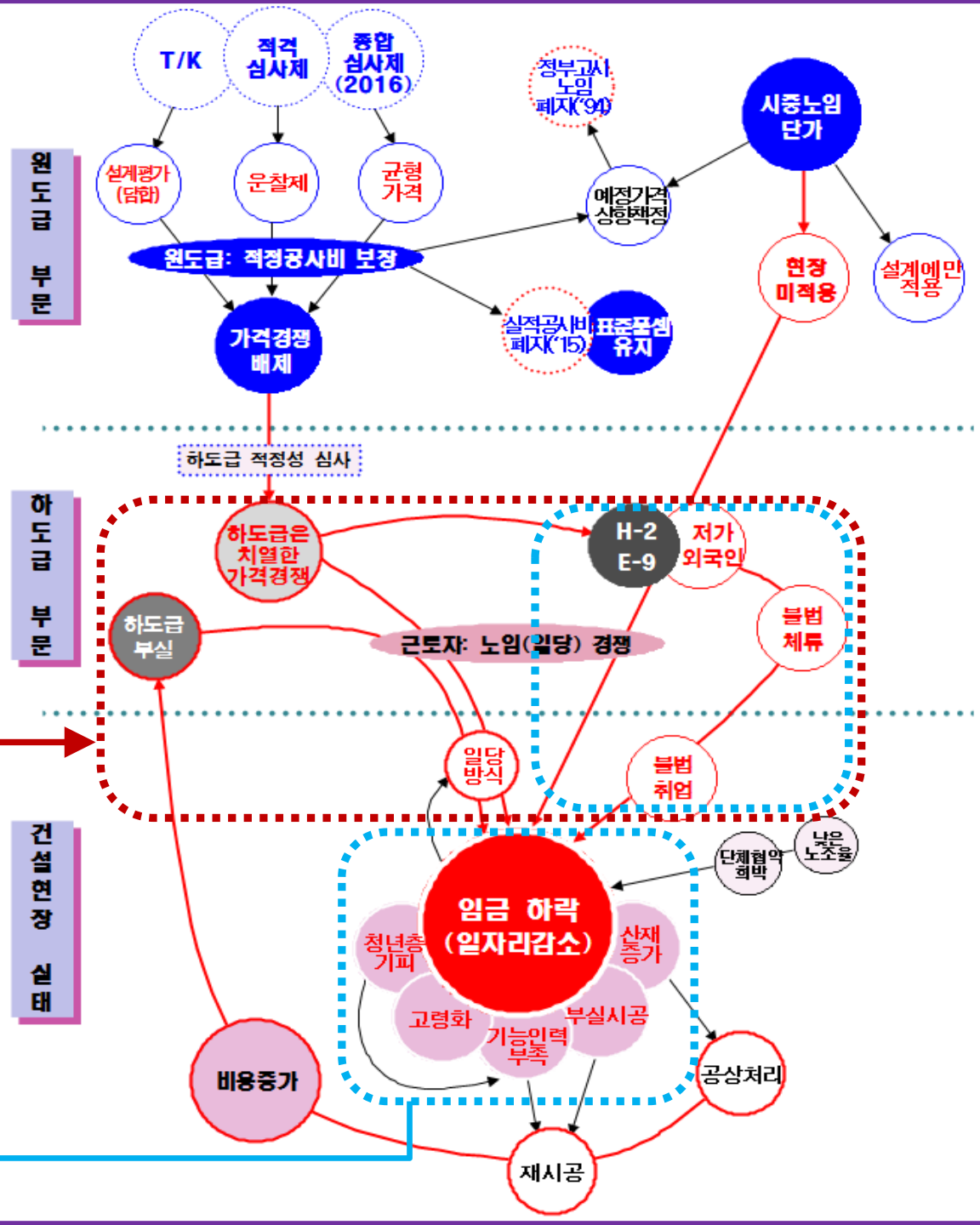
3개 부문으로 구분

上. 경쟁배제된 원도급부문

中. 치열한 가격경쟁의 하도급부문

下. 임금과 일자리 경쟁하는
건설현장 실태 부문

- 원도급은 경쟁하지 않으나,
밑바닥은 외노자와 일자리경쟁
- 임금하한기준 부재
 - 저가 외노자 무분별 투입
 - 서민일자리 잠식(침탈)
 - 기능공부족 악순환



공사비용의 설계, 현장 상이

정부

❖ 정부(국토부, 노동부)의 직무유기

- 헌법 제32조 적정임금 보장 노력 부재 → 현장노임 하락 방지대책 없음
- 영리단체인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업임금 조사 수행
- 반면, 미국은 정부(노동부) 책임하에 노임조사 수행

교차 검증 없음

설계

❖ 시중노임단가(노무비)에 대한 검증 부재

- 시중노임단가는 설계가격 산정에만 활용 → 실제 집행여부 검증 없음
- 정부발표의 시중노임단가와 실제 현장지급노임과의 괴리
→ 설계기준 노임은 상승 vs. 현장노임은 정체 수준(특히 비숙련공)

불일치

현장

❖ 저가수주의 Risk를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에게 전가 → 안전장치 부재

- 고가수주시, 하도급을 통하여 직접공사비에서 이득 추구
- 저가수주 Risk는 하도급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에게 Risk를 전가
- 대기업 수행현장에서도 노임체불(장비비 포함) 수시 발생
- 업체는 노임절감을 위하여 저가 외국인근로자 유입 로비

V. 건설업 일자리 정상화방안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가.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인식정상화** : 불법고용은 내국인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임**
- **불법고용 원인** : 불법고용은 불법체류(또는 취업자격 이외 취업)에 기인성 높음
- **합법체류 인정** : 불법고용 단속은, **합법적 외국인 체류 · 취업 부정 아님**
 - * **일부 진보진영 및 시민단체는 불법고용 단속을 인권침해로 왜곡하여 인식**
→ 밀바닥 서민인식과의 괴리감 심각. **서민일자리 불법 침탈이 가장 큰 인권침해!**

나. 합법 외국인근로자라도 고용제한 필요

- **단기방안** : 공공 SOC사업에 대한 고용제한 필요
 - cf) 발전소 등 산업설비, 플랜트공사에는 외국인 고용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 **중기방안** :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고용 제한
- **장기방안** : 내국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업종(예: 농 · 어업 등)에만 외국인 고용 허용
 - **건설업종** : 40대 신규진입 및 구직자가 많은 산업부문이므로,
서민일자리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취업 제한

2. 지자체,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고용안정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광역시 조례 있음(광주, 인천, 경북)
- 건설근로자 임금수입[=일당×작업일수] 증가를 위해서는 일당상승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임.
※ 주52시간제는 일용직(정규직×) 건설근로자 일자리를 감소시킴
- 대상사업 : 모든 관급공사(민간공사는 권고)
- 지방계약법령 [공동도급 운영요령]은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규정하였으나, 건설근로자에 대한 최소 최소고용비율 규정은 없음 → 영리법인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일자리 보장 규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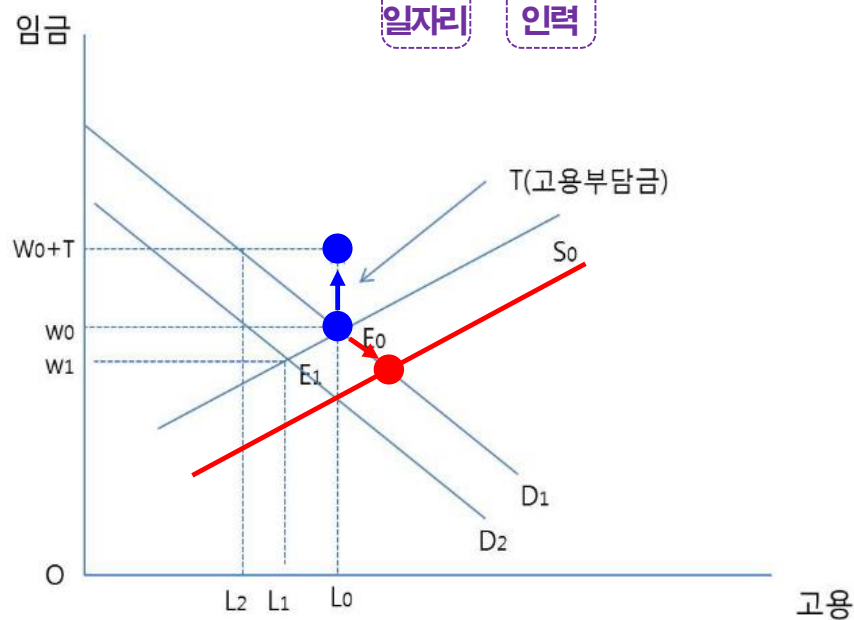
나. 주요 내용(안)

-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의무고용 : 예) 전체 건설근로자 수의 40%이상
→ 수급인은 하수급인 고용인원까지도 관리책임 부과해야 함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 예) SOC사업 및 공동주택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 발전소 등 플랜트공사에 외국인 취업제한
- 건설업체에게 임금지급 확인 의무 부여
- 취업지원센터[일자리] 및 기능훈련학교[인력양성] 설립 내용 포함
- 신고센터 설립 및 위반시 입찰참가제한[패널티] 부과

3.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 내외국인 임금차이, 내국인 인력양성 자원 등으로 활용

건설노동에서의 수요와 공급 법칙



고용부담금제 적용 국가

- ❖ 대만 : 수익자부담원칙, 사업주 특성 반영
- ❖ 싱가포르 : 업종별 숙련도별 차등적용
- ❖ 그외 미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활용방안>

- 내외국인 임금차이 반영 : 현실성
- 외국인력 고용상한 비율과 고용부담금제 연계
- 외국인력의 의존도 조절 및 산업구조조정 원칙의 적용
- 업종 및 규모별 차등화
- 고용부담금의 활용 및 운용체계 구축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

-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or 외국인 근로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
- ✓ **쿼터제**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규모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임

Ex) 대만 「취업서비스법」 제55조

***취업안정비(고용부담금)**

“사용자가 초빙 고용한 외국인이 취업서비스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취업 촉진, 노동복지 개선, 외국인 총원 관련 행정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취업안정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불법고용 적발기능 강화

가. 불법고용 신고센터 상시가동

- 현행 중앙정부(법무부, 고용부) 위주의 단속은 한계
- 지자체에게 적발권한(+책임) 부여 : ex) 특별사법경찰관
- 불법고용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적정임금 위반 적발기능 부여

나. 불법고용시, 원도급업체에게 관리부실 책임 부여

- 불법고용 대부분은 하도급 이하단계에서 이루어짐.
∴ 모두 하청에 의존하므로, 원도급업체에 의한 고용이 거의 없음
- 불법고용 현장 원도급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 패널피 부여
및 벌점 부과 등으로 공공공사 낙찰시 불이익 부여

다. 민간공사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 구축

- 인·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 체결 등

민 간 공 사

- ✓ 허가권자(지자체)가 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
 - 허가권자에게 책임 부여
 - 건축주는 허가시 감리비용 예납
- ✓ (민간)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지자체 지역건축센터에서 수행
 - 민간감리자를 통한 품질관리, 감리보고서 검토 등

5. 동일노동 · 동일임금 원칙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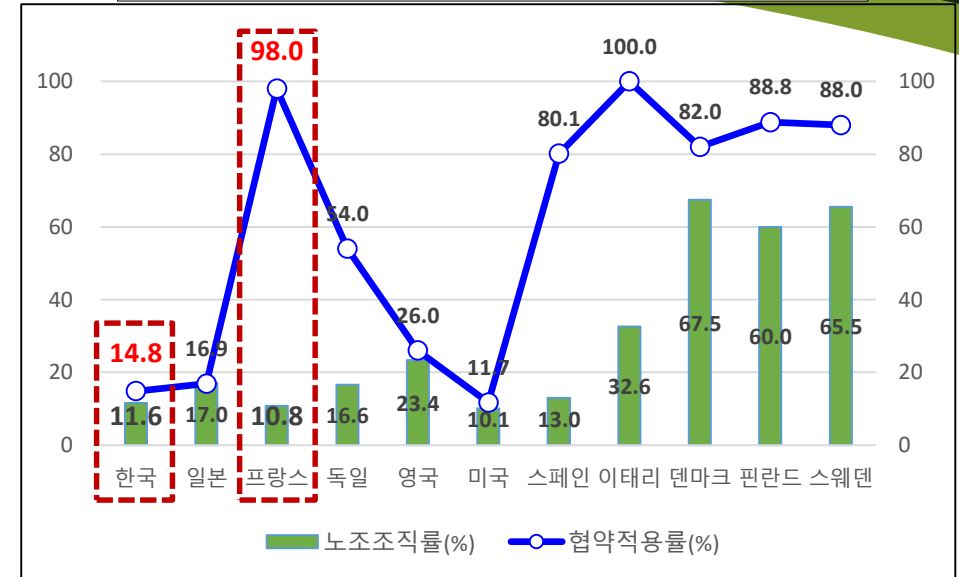
가. 적정임금제(직종별 임금하한 기준) 시행

- 2018년 및 2019년 시범사업 시행 : 20건 현장
- 입법발의 : 건설근로자법(송옥주), 건설산업기본법(김교흥)

나.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도입

- 동일노동 · 동일임금을 위한 합리적 방안 → **외국인도 적용**
- 기능인력의 대다수가 하도급에 고용되는 현실에 적용 필요

고용부담OECD 주요국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_2018년 기준



6.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설립

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상설 취업사업 기구 설립

- 건설근로자 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안정적인 일자리확보로 임금수입 증가

나. 건설근로자 기능훈련학교 설립

-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기능 습득 : 도제식(현행) → **체계적인 교육방식**으로 전환
- 기능학교 운영으로 **청년고용문제 해결**, 이론교육과 병행하여 현장투입 교육

[현장의 목소리]

“인력소개소는 일당 9만 5천원(일당 9만원, 식사비 5천원)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만원을 뺐다. 순수 일당만을 기준으로 보면 1천원을 더 댔 셈이다. 한 달 150만원을 번다고 했을 때, 인력소개소가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은 17만원 정도다.” - ○○○ 일용근로자 -

출처 : 고용노동부, 제3차('15~'19)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감사합니다!

**중산층에 편향된 의제설정과 하위 계층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물리적 공격 등 극단적인 부작용으로 한국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한국경제, 노경목기자-**